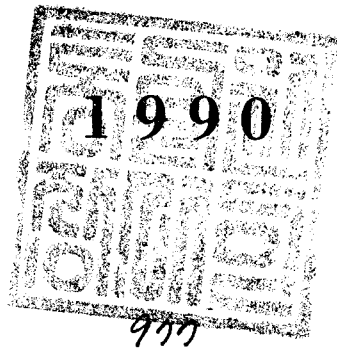


2131
5/12

국통조 90-12-105

統一理念과 民族共同体形成



統一院

冊을 내면서

- 이 冊子는 統一院 政策調查研究 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된 特殊課題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 이 研究는 國內外 狀況變化와 關聯하여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 갖고 있는 時代的 適實性和 合理性의 提示를 통해 國民的 共感帶 擴大 및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教育의 內容, 方向 등을 中心으로 考察한 것입니다.
- 關聯 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資料로 積極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12.

調查研究室

한民族共同体 形成의 理念과 論理

(研究責任者：李容弼)

國民的 合意의 導出과 民族共同体 形成

(共同研究者：李華洙)

社會主義體制의 變化와 한民族共同体統一方案

(共同研究者：朴弘圭)

한民族共同体統一方案과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方向

(共同研究者：鄭世九)

한民族共同体形成의 理念과 論理

李 容 弼
(서울大)

目 次

1. 머 리 말	5
2. 한民族共同體 形成의 理念	7
3. 現段階에서의 한民族共同體 形成의 條件들	12
4. 民族共同體와 機能的 統合	15
5. 民族同質性的 回復과 統一에의 跳躍	18
6. 맺 음 말	22

1. 머리말

우리 民族은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單一民族으로서의 文化傳統을 繼承 發展시켜 왔으며 수많은 外侵과 國難 속에서도 單一民族으로서의 團結力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단합된 민족의 底力을 連綿히 이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第二次 世界大戰의 종결과 더불어 東西 兩大陣營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民族은 우리의 意思에 反한 國土分斷의 悲劇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國土分斷은 6.25 動亂을 겪으면서 休戰線으로 바뀌었고 중국에는 民族을 둘로 갈라 놓는 民族分斷線이 되었다.

祖國의 分斷은 自身の 過誤에 의한 應報도 아니고, 自身の 自由意思도 아닌 他意에 의한 民族分斷의 悲劇이었다.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가 他意에 의하여 分斷이 强要된 채 統一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苦痛과 悲哀는 우리와 같은 分斷國의 國民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南北分斷이 45년간 이어져 오면서 우리 民族의 자존과 이익은 크게 손상되어 왔으며, 이러한 分斷이 계속된다면 수천년 동안 單一民族으로서 共同體를 이루면서 살아온 民族的 傳統마저 상실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¹⁾ 우리 民族의 운명과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民族의 統一이 인도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民族의 異質化와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放置할

1) 李洪九,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政策基調와 實踐方向”,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國土統一院, 1990), pp. 9 ~ 10.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다. 그래서 韓民族共同體의 再形成 또는 回復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韓民族共同體 形成의 基本理念과 이에 의거한 統一指向的 接近의 현실적 논리에 대해서 論하려고 한다.

2. 韓民族共同體 形成의 理念

우리가 추구하는 韓民族共同體는 우리 民族이 이 땅에서 수천년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韓民族共同體가 45년간 갈라진 결과, 무엇보다도 民族의 共同體 意識이 退色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이 추구하는 理念과 體制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民族의 피보다 더 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南北韓의 民族共同體意識의 認識이라는 過程이다. 이것은 政治的 節次에 앞서서 社會的 統合의 確認必要性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南北韓의 統一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공통분모를 추출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협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²⁾

우리가 염원하는 統一된 祖國은 民族構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라고 하겠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는 현재 南北으로 갈라진 民族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우리 民族의 統合을 이루고자 하는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根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餘年間 누적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 敵對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統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分裂이 外勢의 一方的 決定에 의해서 초래되었다

2) 高永復,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意義-社會的 側面,” 上揭書, pp. 76 ~ 79.

하더라도, 우리 民族이 겪었던 슬한 試鍊과 苦痛을 이제는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分斷과 戰亂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에 平和와 統一에 대한 우리의 희망도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特히 東西間의 新데탕트의 霧圍氣가 조성되고 東西社會主義圈에서의 改革과 開放이 高潮되고 있는 狀況에서 우리 民族만이 分裂과 反目 속에서 民族의 力量을 非生産的으로 消耗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南과 北 間의 敵對的 狀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民族은 異質化될 뿐만 아니라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地球上의 모든 民族이 國際政治의 각박한 現實과 치열한 競爭 속에서 生存의 길을 探索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民族은 언제까지나 南北間의 葛藤關係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特히 우리는 東西獨 關係의 劇的 變化와 獨逸民族의 統一에 대한 意志와 그 努力의 結實을 우리의 分斷克服을 위한 視角에서 思慮깊이 吟味하고 또한 教訓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한 民族共同體 形成의 根本目的은 分斷克服을 위한 意志와 民族共同體의 存續을 위한 具體的 方法을 連繫시키는 데 있다. 政府當局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統一問題를 民族概念을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統一方案에서 民族的 문제가 도외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분단된 국토와 국가의 再統一이라는 空間的 次元에서 통일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分裂과 對決의 피해로부터 民族을 구출해야겠다는 사명감에만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는 민족을 통일문제의 중추적 개념으로 놓고, 단순히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민족번영의 民族史의 展開라는 次元에서 統一問題를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3)

그러나 단순한 分斷克服보다 더 절실한 것은 分斷狀態를 放置함으로써 惹起되는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防止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國家는 有限하지만 民族은 永遠하다라는 命題의 숨췌을 오늘의 分斷狀況에 비추어서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0餘年間 持續해온 韓半島에서 두개의 異質的 理念과 體制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南北으로 分裂된 民族共同體는 끝내 그 瓦解를 면치못하게 될 것이다.

自己存立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南北體制가 統一을 추구하려면 각자의 생존이 보장되고 戰爭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적개심이 사라져야 한다. 南北韓에 상호불신이 있는 한은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南北社會의 저변에 깔려있는 대립감정, 위기의식, 피해의식 같은 부정적 요소가 불식되지 않고서는 統一의 가능성은 없다. 相互信賴를 위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南北韓이 共同體意識을 가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共同體란 함께 같이 사는 하나의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성원들의 確認에서 성립될 수가 있다. 같은 하나의 집합체에 속하고 있는 부분임을 서로가 認定할 때 비로소 共同體意識이 成立될 수가 있다. 4)

바야흐로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情勢와 南北韓 兩體制의 內的 變化의 흐

3) 國土統一院,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 1990.
p.15.

4) 고영복, 上揭論文, p.80.

름은 統一問題에 관한 한 認識과 發想의 轉換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認識과 發想의 轉換을 통해서 韓民族共同體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폭 넓게 열려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南과 北이 과거 45년간 겪었던 敵對와 對決意識을 拂拭할 수 있으며 또한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異質化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南과 北은 變化된 內外的 狀況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適應하기 위해서 前時代的인 冷戰의 思考를 과감하게 脫皮하고 동시에 民族構成員들 간의 和解와 協調의 雰圍氣를 造成해야 한다.

이제 우리 民族은 스스로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力量을 갖게 되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民族의 성숙된 民族力量에서 비롯된 自信感을 바탕으로 해서 北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民族의 共同繁榮을 추구함으로써, 통일문제를 어느 누가 아닌 南北韓 당사자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立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 形成의 기본이념은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防止하고 나아가서는 民族共同 繁營과 統一國家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民族共同體 形成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할 統一國家는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民族國家여야 한다.”⁵⁾ 이러한 民族國家는 어느 特定 集團이나 階級の 專橫이 없는 體制이어야 한다. 물론 統一國家의 政治理念, 國號, 國家形態,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統一政策과 國會의 構成을 위한 節次와 方法등은 궁극적으로 民族構成員 전체의 自由意思가 반영된 統一憲法에 따라

5) 國土統一院,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基本 解説 資料〉, 1989. 9, p.30.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의 統一國家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統一의 過程을 民族的 觀點에서 南北이 共存共榮의 土臺 위에서 연합하여 單一民族社會를 지향함으로써 單一民族國家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統一國家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過程에서 첫째 民族이 主體가 되는 自主的 統一, 둘째 民族自由意思가 고루 反映되는 民主的 統一, 셋째 對話와 協商을 통한 平和的 統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統一祖國의 位相과 統一祖國이 추구해야 할 理念的 指標로서의 民族主義, 民主主義, 國際主義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⁶⁾ 統一國家가 이러한 普遍的 原則들을 추구할 때 비로소 民族의 영원한 自尊과 繁榮 그리고 自由가 保障될 수 있으며 동시에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統一環境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염원하는 民族統一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6) 國土統一院, 「問答式 統一問題 解說」, 1989, p.32.

3. 現段階에서의 한民族共同體 形成의 條件들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방지하고 그 存續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民族의 統一이 가장 절실한 課題이긴 하지만 統一의 目標과 함께 그 手段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平和的 方法에 의한 民族共同體의 回復과 存續 그리고 이에 의거한 統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民族共同體의 形成은 반드시 平和와 統一을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하겠다. 한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기본조건들은 이미 平和統一 三大原則에서 明白히 闡明되고 있다.

1) 南北間의 緊張緩和

南과 北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 대해서 合議하기 위해서 먼저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을 위해 相互 努力해야 한다. 武力에 의한 統一이 얼마나 非人道的이며 反民族的이며 또한 非現實的이라는 것은 이미 6.25의 戰爭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南과 北은 相互 誤解와 不信을 해소하고 緊張의 高潮를 완화시키는 데 共同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7.4 共同聲明에서도 明白히 제시한 바와 같이 南과 北은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非難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武裝挑發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故를 防止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措置를 취한다. 南과 北은 雙方間에 紛爭問題 解決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脅을 완전히 止揚하고 모든 問題를 相互 對話와 妥協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한다. 韓半島에서의 戰爭危險性を 根本적으로 解消하기 위해서 南과 北은 相

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雙方은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의 止揚과 軍事的 對置狀態의 解消措置를 取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軍備競爭을 止揚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統制를 실현해야 한다.

2) 南北의 對外關係

南과 北은 緊張緩和와 國際協助에 도움이 된다면 北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 下에 南과 北이 다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南과 北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 까지 思想, 理念, 制度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 기 체결한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協議한다.

南北間의 소모적인 競爭, 對決外交를 종결하고 北이 國際社會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南北代表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韓半島의 平和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北이 美國, 日本 등 우리의 우방 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추구한다.

3) 南北의 相互開放

南과 北이 40年間 分斷된 以來 民族間의 異質化가 深刻한 문제로 나타났다. 民族共同體의 存續이나 國際情勢 추이에서 볼 때 南과 北은 互惠平等의 原則 下에 相互 또는 모든 國家에게 開放해야 한다.

南과 北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평을 해소하여 민족적 信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相互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社會的 開放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南과 北은 이산가족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포함해서 南北間의 자유로운 人的 往來와 다각적인 交流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交通, 우편, 통신, 체육, 학술, 教育, 文化, 報道, 保健, 技術, 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위해서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相互開放과 多角的인 交流는 共同繁榮의 經濟圈을 형성하며 南北 모두의 發展을 이루고 民族構成員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基本條件들이 南北韓 體制에 의해서 充足될 때 韓民族共同體가 명실상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9月 初旬과 10月 中旬에 열렸던 南北의 제1차 및 제2차 高位會談에서도 統一에 接近하는 視角은 아직도 差異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南北間의 緊張緩和, 南北의 對外關係에 대한 前向的 態度 그리고 南北의 相互開放 및 多角的 交流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接近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南北의 努力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리고 相互理解의 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韓民族共同體를 위한 條件들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따라서 民族統一에의 길이 漸次的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다.

4. 民族共同體와 機能的 統合

1) 民族共同體의 回復

民族共同體란 民族이 集團的으로 生活을 營爲하는 共同體를 말한다. 여기서 民族이란 共通의인 結束力에 의해서 함께 결속된 人間의 集團이다. 이러한 結束力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共通性에 나타나는 心理狀態의 共通性을 기초로 해서 形成된다. 따라서 民族이란 歷史的으로 共通性과 結束力에 의해서 구성된 集團의 견고한 共同體라고 한다. 그런데 民族이 共同體로서 存續하려면 共通性만으로는 充分한 條件이 될 수 없다. 民族構成員들 간의 지속적인 意思疏通 (communication) 에 의해서 民族의 實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民族은 타고난 特徵이라고 하기 보다는 社會的 學習과 習性形成過程의 結果라고 하겠다.”⁷⁾

民族의 生存空間으로서의 共同體는 領土的으로 境界지워진 社會體系 또는 서로 맞물려 있는 또는 統合된 機能的 下位體系들 (social system or set of interlocking or integrated functional sub-systems)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共同體는 經濟的, 政治的, 宗教的, 倫理的, 教育的, 法的, 社會化, 再生産 등의 下位體系들이 작동하고 있는 社會體系라고 할 수 있다.⁸⁾ 여기서 의미하는 共同體의 개념은 調和, 사랑, 우리意

7) Dankwart A. Rostow, "Natio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 12.

8) Jessie Bernard, "Community Disorganization," 上揭書, p. 163.

識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最小限의 合意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로 맞물려 있는 또는 통합된 機能的 體系들의 複合體로서의 民族共同體는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있으나 民族共同體 自體가 分裂된 狀況 아래서는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없게 된다. 더우기 이러한 非正常的 分裂狀況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民族共同體의 分斷된 部分들은 相互 異質化를 深化시키게 되며 급기야는 民族共同體의 瓦解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그 正常的 作動을 위해서 南과 北의 機能的 統合이 漸進的으로 요구된다.

2) 中間段階로서의 南北聯合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餘年間 누적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 敵對의 關係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統一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南北의 分斷과 이로 말미암은 民族의 異質化는 南北의 社會構造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있어서 民族의 同質性 회복을 위한 中間段階를 거치지 않고서 完全的 統一에의 段階에 이를 수 없다. 統一로 가는 中間段階로서 南과 北은 서로 다른 두 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共存共榮 하면서 民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을 촉진해야 한다.

고영복 교수에 의하면, 南北韓이 機能的 統合은 합의만 된다면 現實可能性이 있다. 그것은 價値를 상호조정하면서 共通의 指向을 추구하는 중간적인 단계를 둔다는 의미에서 實用的이면서도 現實的인 것이다. 機能的 統合이 성공하려면 (1) 각기 體制間에 專門化와 分業이 이루어져야 하고, (2) 각기 체제간에 相互補完的인 關係가 재확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3) 이러한 관계를 이끌어갈 적절하고도 一貫性있는 규제적 절차가 있어야

하고 (4) 包括하는 上位單位機構가 效率性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5) 規則을 周知시키고 문제점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의 通路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⁹⁾

南과 北은 統一에 접근할 수 있는 中間過程을 制度化하기 위해서 過度的 聯合體制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南과 北은 民族共同體의 틀 안에서 聯合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國家間的 關係가 아닌 民族內部的 特殊關係를 가지게 되며, 안으로는 相互間的 關係를 協議, 調節하고 밖으로는 소모적 競爭을 지양하고 민족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따라서 南北聯合은 國家聯合이나 聯合國家의 概念이 아니며 機能的 側面에서 볼 때 여러 國家가 하나의 生活空間 形成을 지향해 가고 있는 유럽 공동체나 노르딕 연합체와 性格이 類似하다고 하겠다.

南北聯合 안에서 南과 北은 각자의 外交, 軍事權 등을 보유한 主權國家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 동안 單一國家를 유지해 온 民族의 전통으로 보아 南北聯合은 1民族2國家를 의미하는 國家聯合이 될 수 없으며, 分斷狀況下에서 완전한 統一實現 時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關係라는 점에서 특수한 結合形態라고 하겠다.¹⁰⁾

9) 고영복, 前揭論文, pp.88 ~ 89.

10)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1989.9, p.25.

5. 民族同質性的 回復과 統一에의 跳躍

한民族共同體의 再形成을 추구하고자 하는 目的은 民族共同體의 永久的 瓦解를 防止하고 또한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民族統一에의 길을 앞당기는 데 있다. 統一院 當局者도 지적인 바와 같이 南北韓 두 體制가 分斷의 固定化가 아니라 民族同質性을 갖고 民族共同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基本原則이다.

理論的으로 말하자면 民族의 同質性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民族共同體의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들의 繼起的 統合過程을 發展시켜야 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異質化된 南北의 두 社會가 一時에 그리고 全面的으로 統合하기란 物理的으로나 意識的으로나 불가능하다. 現단계에서 우리가 民族共同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中間段階로서 1民族 2體制를 聯合體로 만들어 이 聯合體에서 각종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南北韓이 상대방 體制를 서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體制聯合을 형성해 外交와 國防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람과 물자의 交流를 강화함으로써 信賴를 회복한 다음 『1民族 2國家』로서의 民族共同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11)

그러므로 南北間의 統一은 複合的 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에 이르는 過度的 또는 中間的 段階로서 南北聯合을 설정함으로써 民族共同體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民族共同體가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들로 구성된 複合體이므로 이러한 複合體를 회복시

11) 金學俊, “民族共同體와 南北韓 體制聯合 研究: 제6 共和政 한민족 公 동체 통일방안의 背景,” 「統一問題研究」, 1권 3호, 1989 가을, p.27.

킨다는 것은 繼起的 過程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異質化的 累積은 어떤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들 간의 統合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解消될 수 있다.

에치오니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背景的 特徵들이 統合에 대해서 同一한 適實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異質性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統合을 저해한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人種的 起源, 文化的 傳統, 言語 및 宗教에 있어서 背景의 同質性이 安定的 政治單位에 있어서 必須不可缺의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事實上 많은 경우에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文化的 同質性이 聯合體가 형성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統一에 있어서 必須 先行的 條件도 아니며 充分條件도 아니다.¹³⁾ 또 統一에 先行된 모든 條件 중에서 政治的 定向과 構造的 同質性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할 수 없다.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異質化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면서 統合을 지향하려면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疏通과 接觸이 要求된다. 그래서 도이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單位的 意思疏通能力이 統一過程의 하나의 결정적 要素”라고 하겠다.

12)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p.19.

13) 上揭書, p.23.

南北의 異質的 單位들간의 統一의 跳躍過程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變化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境界를 넘어선 人的, 物的 疏通의 흐름의 增加이다. 어떤 變化는 單位 간의 意思決定量의 增加를 요구하게 되며 그러한 增加된 共有活動은 單位間 흐름의 增加 以上으로 共通의 意思決定의 必要性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 다른 하나는 어떤 한 部門에서의 統一이 다른 部門들에서의 통일을 자극시키게 되는 2次的 起爆劑 作用이라고 하겠다. 政治的 統一過程의 初期段階에서 下位單位들 간의 “聯合體들은 軍事的, 經濟的, 政治的 및 教育的 部門들을 포함한 많은 社會的 部門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部門들의 統一이 分裂된 民族 共同體의 統一에 있어서 最適의 基礎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¹⁴⁾

南과 北 間的 統一에 이르기 위한 過程에서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互惠的인 部門은 文化的 및 經濟的 交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經濟的 統一이 가장 큰 波及的 價値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이 最上의 跳躍基礎가 될 것이다.”¹⁵⁾ 文化的 部門과 經濟的 部門이 最適의 跳躍基礎를 제공하도록 南과 北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 統一過程은 比較的 용이하게 促進될 수 있다. 最適의 跳躍基礎를 제공해 줄 수 있는 機能的 下位單位들의 相互關聯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波及效果는 더 增加된다.

南과 北이 民族共同體의 回復을 위해서 南北聯合을 형성하고 同時에 機能的 統合의 첫 段階에 진입한 후 그 南北聯合이 最適의 跳躍基礎를 마

14) 上揭書, p. 55.

15) 上揭書, p. 55.

런하게 된다면 安定된 南北聯合으로 發展된다. 南北聯合의 統合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된다면 그것은 實質的 政治共同體 또는 民族共同體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에치오니의 觀察에 의하면 統一은 높은 水準의 統合과 充分한 範圍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聯合體는 상당한 기간 存續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높은 水準과 充分한 範圍의 統合은 덜 統合된 그리고 덜 包括的 統一의 형태보다 도달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의 反證은 “고도로 統合되고 또한 넓은 範圍에 걸친 聯合體들이 일단 확립된다면 그것들은 잘 統合되지 않았거나 또는 包括的이 아닌 聯合體들보다 더 安定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反證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의 統合은 中間水準의 統合과 낮은 水準 또는 中間水準의 範圍의 聯合體들에서 찾을 수 있다.”¹⁶⁾

이러한 統合命題들의 脈絡에 비추어 보아, 南과 北은 短時日 內에 그리고 全面的으로 再統合을 서두르기보다는, 互惠의 原則에 입각해서 民族共同體의 回復을 위해서 南北聯合을 형성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下位單位들 간의 機能的 統合의 最適의 跳躍基礎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南과 北이 統一을 지향하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中間水準의 統合과 낮은 水準 또는 中間水準의 範圍의 聯合體, 즉 南北聯合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複合的 繼起的 過程을 거쳐서 終局的인 統一國家를 實現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6) 上揭書, p.56.

6. 맺 음 말

우리가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防止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民族의 分斷을 平和的으로 또한 슬기롭게 解決하고 이 땅에서 統一을 成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認識에서 우리는 統一問題를 民族概念을 中心으로 해서 接近해 보려는 것이다.¹⁷⁾ 統一이 民族成員 모두의 절실한 念願이며 또한 民族이 生存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기 때문에 民族共同體의 回復이야말로 우리 民族이 當面한 至上課題라고 하겠다. 따라서 民族의 삶이 터로서의 民族共同體가 回復되지 않고서는 民族生存과 繁榮이 期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統一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45년간에 걸쳐 심화된 民族의 異質化가 단번에 解消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相異한 理念과 體制에서 生活해 오던 南과 北의 住民들이 단번에 융화될 수 없으며 또한 葛藤이 解消될 수 없다. 이와 같은 民族構成員들 간의 異質化와 葛藤은 漸進的으로 또한 順理的으로 解消시키는 方法 以外에 찾을 수가 없다. 民族共同體의 回復은 民族統一 또는 統一國家를 指向하기 위한 必須的 段階이므로 이러한 段階에의 接近은 당연히 民族成員 모두에 의한 合意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다.

民族構成員 모두의 合意에 기초한 民族共同體의 形成은 자연히 南北間의 機能的 및 段階的 統合過程을 거쳐서 實現하게 되며 이러한 統合過程이 民族統一에의 跳躍을 可能하게 만든다고 하겠다.

17) 이흥구, 前揭論文, p.15.

國民的 合意의 導出과 民族共同体 形成

李華洙
(亞洲大)

目 次

1. 序 言	27
2. 南北分斷과 葛藤의 理解	30
(1) 分斷構造에 對한 理解	30
(2) 葛藤의 樣相과 原理	36
3. 民族共同體 形成	44
(1) 共同體의 概念	44
(2) 異質化된 差異에 對한 認識	45
(3) 社會的, 文化的 統合과 同質性 回復	51
4. 國民的 合意의 導出	57
(1) 合意導出의 現況	57
(2) 輿論과 弘報를 통한 合意	59
5. 結 論	63

1. 序 言

독일이 통일되고 북한과 일본이 접근하여 관계를 正常化하고 있으며, 韓國과 소련이 이미 수교하여 통일을 위한 주변환경이 무르익었다. 남북한의 축구팀이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함으로써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선 상당히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북경아시안게임과 평양에서의 우리 축구팀을 환영하는 광경에서 북한의 국민들이나 남한의 국민들 모두가 統一을 念願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같이 고조된 기대와 念願이 과연 統一을 向한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대로 좌절되고, 포기하거나 쓰러지고 말 것인가? 이와 같은 통일외지의 向方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

제 6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 내포하고 있는 상호간의 인정, 信賴回復을 위한 폭넓은 교류 및 民族共同體의 회복 그리고 총선거를 통한 統一이라는 3단계의 내용이 앞으로의 南北韓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관심사이며, 이런 과정이 진척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統一方案이 정부의 案으로만 남아 있어선 안되며, 전 남한의 국민들이 폭넓게 지지하고 성원하는 國民의 合意에 기초하는 案으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南北韓國民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統一이 가능해질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民族的 共同體가 형성되고 전민족의 合意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지나치게 當爲論的이고 一方의이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진단해내는 科學的 연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들과 통일방안들은 關心을 일으키고

가능성을 찾아가는 초보적 단계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統一을 가능케하는 올바른 처방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들이다.

이런 시작에서 보면 제 6 공화국의 통일방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들로 구성된 것 같다. 적어도 우리들의 思考와 論理的 틀에 의하면 그렇다 하지만 상대인 北韓人들의 論理와 思考 및 心理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北韓에 대한 냉철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이해와 연구가 좀 더 심각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다 더 구체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統一政策이 형성되고 우선 國內的 合意과정을 거쳐 남북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分斷構造 葛藤의 原因과 양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가 더 되어야 하고 北韓의 政治體制와 지도자들의 心理的 상황에 대한 깊은 연구가 더 진전되어야 한다.

民族共同體에 대한 概念도 명확해져야 하며, 한핏줄 한민족이라는 歷史的, 自然的 民族概念 이외에 북한 사람들이 가지는 概念과 우리가 가지는 概念에 대한 연구로 심층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서독이 결국 막강한 서독의 경제력을 기초로 하여 흡수통일되었지만 동독은 한 때 「2民族, 2國家論」을 내세웠었던 것이 아닌가, 「社會主義 독일 민족」과 「資本主義 독일 민족」이라고 하는 概念이었다. 언어와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함께 하는 한핏줄이지만 理念의 차이로 인하여 엄연히 다른 두민족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多幸스러운지 모른다. 北韓은 철저히 「일국가 일민족」을 주장하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은 南韓을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社會主義化 한다는 理念과 戰略의 產物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民族共同體 形成의 概念이 쉽게 이해되고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

만 北韓인들이 가지는 共同體概念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없지만 남북한의 갈등구조의 현황과 원인을 점검해 보고, 민족공동체 형성 및 統一方案이나 政策을 위한 合意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南北分斷과 葛藤의 理解

엄연히 實在하고 있는 정치현실로서의 분단상황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견적인 주장만이 산재할 뿐 綜合的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6.25 전쟁과 같은 침여화된 葛藤과 分斷狀況을 종종 일어불게 만들어 놓은 그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주장과 이론이 분분했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너무나도 自明한 남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민들은 북침으로 알고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남한의 젊은 세대들 간에도 북침설이나, 남한이 유도했다는 說 등을 주장하기도 하는 상황이고 보면, 이와 같은 歷史的 사건의 歪曲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최근 國內新聞에 보도된대로 흐르시초프의 비망록 제 3 권에서 “6.25는 김일성의 계획을 스탈린이 승인한 것”으로 기록하여 公開됨으로서 북침설이 虛構임이 밝혀졌으나 미국과 남한이 유도했다는 說이나 해방이전부터 시작된 해방전쟁이 마지막 단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커밍스의 주장까지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다.¹⁾

(I) 分斷構造에 對한 理解

분단상황에 대한 客觀的이고 包括的인 이해와 合意는 民族共同體의 형성과 統一政策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우선 分斷을 이해하는 데 몇가지 어려움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1) Bruce Cumings(ed.),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얻기 어렵다는 점과, 또 그 자료들마저도 일방적이어서 해당국들의 입장이나 해석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包括的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의 불완전성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²⁾

한반도 분단의 의미는 몇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國家分斷으로서 1945년 이래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한 冷戰體制로 인하여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실제적으로 두개의 國家가 성립되어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國土分割로서 처음에는 38度線을 경계로 하였고 휴전 이후에는 휴전선에 따른 비무장 군사분계선으로써 國土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놓았다. 셋째는 民族分裂로서 5천년 동안의 文化的, 社會的, 人種的, 言語的 同質性を 갖고 있는 한국민족을 분할, 격리시켜 異質化시켜 온 것이다. 넷째는 體制的 分割과 葛藤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및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相異한 체제로 대결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이며, 끝으로 다섯번째는 환경까지도 분단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주변환경의 국가들과 이에 連累된 모든 요인들이 적대적 대결 속에 있어 국가적, 국토적, 민족적, 체제적 분단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이질화시켰던 것이다.

분단상황을 초래하게 된 요인들은 國內的 要因들과 國外的 要因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주로 역사적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식민지의 유산, 해방이후 左右勢力의 양극화와 대결, 국내정치의 세력기반의 유약함과 사회세력, 階層間的 分열과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다루어 온 요인들이다.

2) 양성철, “분단이론의 정립,”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22-25 면.

분단의 國外的 要因들로서는 전후 미·소 양대진영의 冷戰體制의 심화,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둘러싼 각축전, 그리고 전쟁이후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의 연합군의 점령, 통치, 신탁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미·소간의 의견의 대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³⁾ 이러한 국내적 요인들과 국외적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分斷이 이루어지고, 固定化되어 오늘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분단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다루는 소재들은 주로 누가 분단시켰나 하는 責任論, 南과 北 어느쪽이 더 正統性 있느냐 하는 논의, 그리고 이념선호론 및 권력(힘)에 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責任論과 正統性에 대한 是非는 앞으로 統一政策을 合意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책임론에는 미국책임설, 소련책임설, 미·소공동책임설, 또 어느 편이 더 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국 정치인 책임론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美國은 38선을 그은 제일차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동의, 동조한 소련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본다. 샌더스키는 38선은 미국이 그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⁴⁾, 펠즈는 루즈벨트가 한국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보았고, 실현성없는 信託統治案을 내세웠으며, 트루만은 신탁통치안을 계승하였고, 한반도에 전쟁억지구조를 구축하지 못했으며, 남한방어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침략도발을 막을 수 없었던 것 등⁵⁾으로 미루어 미국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3) 양성철, 앞의 글, 21면.

4)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 Old Dominion Press, 1983), 101면.

5) Stephen Pelz, "Decisions on Korean Policy",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91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美國이 責任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政策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편 정책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적합성이 없었다는 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정식, 서대숙은 미국의 정책부재에 대하여 쓰고 있다. 이정식은 “나는 한반도를 분단하고자 한 미국측의 확고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 나는 1945년에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하고자 했다고도 믿지 않는다. ……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주된 과실은 미·소양측의 적절한 사전계획의 부재에 있었다”⁶⁾고 쓰고 있으며 서대숙은 “미국인들도 준비없이 한반도에 진주했고, 소련군도 준비없이 한반도에 진주했으며 …… ”⁷⁾라고 쓰고 있어, 두 교수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뚜렷한 정책의 준비도 없이 남과 북에 주둔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던 결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하여 양성철은 다음 견해를 가지고 있다. 38선은 미국의 對韓半島 政策의 부재에서가 아니라 카이로회담에서 규정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in due process) 라는 귀절이 윤곽을 나타내면서 미국은 4개국 군사작전, 점령, 미국주도하에 4개국 군사통치, 그리고 유엔하의 신탁통치라는 政策的 構想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원폭투하, 소련군 대일참전, 소련군의 한반도 북반부 진공 등 전세가 급변, 급박해진 상황에서 4국 군사점령안이 38선을 분획선으로 하는 미·소군사점령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⁸⁾고

6) 「시사논평」(1988년 3월호), 11호.

7) 위의 글.

8) 양성철, 앞의 글, 117면.

풀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추진한 對韓政策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무관심하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관계로써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이라는 것으로 대단히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을 공식화시키고 1947년 여름까지 固守하였다. 이는 역시 점령, 군정, 신탁통치안의 정책노선의 구체화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좌우익의 갈등, 특히 우익인 민족세력의 커다란 반대운동으로 전개되는 非現實性을 지닌 것으로서 북한내의 소련군에 대한 견제를 의도하는 美蘇對決構造에서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민과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회구하던 국권의 회복, 자주독립 국가수립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남북분단을 半恒久化시키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게 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미국이 設定하고, 소련이 同調하므로 38선이 확정되어가고 있었으나 한국의 政治人들과 국민들은 단합하여 지지하지 못하고 좌·우익간의 싸움, 우파간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분단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치과정과 상황진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正統性에 대한 論議도 역시 南韓과 北韓과 각자 자기측이 보다 더 正統性和 合法性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分斷狀況을 유지, 지속시키는 데 기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正統性에 대한 주장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存在를 무시하므로 배타적이고 不容的 태도를 갖게 되어 심리적 장벽을 높이 쌓고 분단상황을 굳히는 役割을 해오고 있다.

할리데이는 이승만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자체의 政治體制보다 북한이

政統性이 있는 政權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결정한 3가지 기준, 즉 정치적 原流, 社會政策, 外勢에의 依存度 등에 따라 단정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원류면에서 보면 북한 政府의 지도체제는 反日게릴라투쟁을 전개한 세력들이며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 및 정부에는 親日勢力들이 많이 있었다.

둘째, 사회정책 면에서는 북한은 대폭적인 農地改革과 男女平等을 公式로 인정한 데 反하여 남한에서는 農地改革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사회, 경제관계가 크게 改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外勢依存度에 있어서도 1949년 소련은 북에서 완전철수하였으나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남한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남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이 좌파들의 주장들을 文獻으로 읽고 表皮的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런 文獻들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가 세운 正統性的의 표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유보하더라도 북한세력이 유일한 항일투쟁세력인양 생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범석, 신익희, 조소앙 등 남한의 많은 民族主義的의 抗日鬪士들이 있었음을 고려에 넣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북한의 農地改革은 사회주의(공산주의)적 방법에 따른 완전 無償沒收하여 나누어 준 것이며, 남한은 有償으로 買入하여 배분한 형식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男女平等은 레닌의 이론에 따른 사회주의 사회의 理念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며, 외세의존도의 문제도 표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할리데이의 주장으로라면 사회주의정권은 자본

9) John Halliday, "Commentary", Cumings의 위의 책, 164

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 정권에 비하여 보다 더 정통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분단의 실현, 고착화, 유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다. 政治的 現實로서의 分斷에 대한 客觀的이고 과학적인 이해는 앞으로 통일정책을 펴 나가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분단상황을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보아 모든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사실 매트레이 같은 사람은 “만약 미국이 한반도 정치에 개입하여 분단을 초래했다고 미국을 비판하는 한반도 사람들이 공산정권하에서 소련의 영향력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를 더 좋아한다면 그때는 그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共產統一을 선호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트루만은 38 선을 결정한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¹⁰⁾

(2) 葛藤의 樣相과 原因

한반도의 분단은 분단되어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南北이 敵對感을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葛藤하고 紛爭을 거듭하여 옴으로써, 경쟁자로서의 관계를 넘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증오해왔다는 데에 보다 깊은 문제가 깃들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알타」와 「포츠담」에 의한 38 선을 경계로 한 분할만이 아니라 6.25 사변을 통하여 분단화현상이 固着化되었고 계속적인 南北間의 갈등과 충돌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10) James K.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253-258 면.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갈등은 대립의 첨예화, 적대적 증오의 관계로 성격지워질 수 있다.

남북의 분단, 갈등, 그리고 통일은 서로 불가분의 連繫性을 가지고 있으나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論議만 주로하면서 갈등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해 온 감이 있다. 경험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갈등 연구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은 일반적으로 생성, 성숙, 감소 및 종결이라는 단계적 주기에 따라 진전되지만¹¹⁾ 남북한의 갈등은 6.25 전쟁을 시발점으로 시작한 이래 끝없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통의 갈등형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상태에서 무력충돌까지 間歇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國際的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비방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지속된 상황 속에서 客觀的으로 갈등상황을 把握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갈등의 특징인즉 무력적 마찰이나 테러행위, 그리고 挑發的 사건 뿐이 아니라 민족내부적, 이념적, 국제적인 여러 측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북한측의 자료는 거의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극히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며 신뢰성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挑發이나 갈등조장 행위에 대한 자료만 쓰게 되면 客觀性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사용해 온 非平和的 葛藤은 대체로 戰術的 양상으로서 전면무력

11) Edward Azar, Protracted Social Conflict(College Park, M.D. : CIDCM, University of Maryland, 1988), Ch.1.

남침을 비롯하여 간첩납파, 소규모의 무력마찰 등을 포함하는 휴전협정 위반 사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계속해서 상당한 수의 납파된 간첩이 있었고, 유신체제하에서는 약간 숫적으로 줄었으나 반면 휴전협정위반사례의 수는 1970년대에 급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表 1. 年度別·段階別 間諜檢舉現況

段階	年 度	檢 舉 間 諜 數		段階	年 度	檢 舉 間 諜 數	
第 二 段 階	1954	134	921 명 (年平均)	第 四 段 階	1968	348	691 명 (年平均) 69.1
	55	195			69	164	
	56	105			70	150	
	57	152			71	127	
	58	215			72	60	
	59	120			73	64	
第 三 段 階	60	107	1,687 명 (年平均) 168.7	74	86	計	3,299 명 (年平均) 126.9
	61	174		75	63		
	62	131		76	39		
	63	88		77	14		
	64	78		78	23		
	65	108		79	45		
	66	106					
	67	347					

資料：北韓全書, 1980 (極東問題研究所)

출처：金在德, 註 12 번의 글, 426 면에서 재인용.

表 2.

休戰協定違反事例 回數

段階	年度	回	數	段階	年度	回	數
第 二 段 階	1953	39	445 件		67	494	
	54	22			68	780	
	55	15			69	522	
	56	4	(年平均)	第 四 段 階	1970	913	38,431 件 (年平均)
	57	60	64.6 件		71	2,483	
	58	96			72	5,160	
	59	209			73	5,415	
第 三 段 階	1960	183	5,895 件	計	74	4,985	45,960
	61	763			75	5,251	
	62	985			76	7,221	
	63	1,295	(年平均)		77	1,915	
	64	497	589.5 件		78	2,259	
	65	711			79	2,829	
	66	494					

資料：北韓全書（極東問題研究所）

출처：金在德，註 12 번의 글，426 면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세변화 외에도 계속적으로 間諜을 남파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음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내의 官民間에 不信을 조장하고 집권층의 내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후방을 기습하여 극도의 社會混亂을 조성하

러는 戰術目標을 가지는 것이었다. 또한 70 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내의 政權交替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갈등의 양상을 띄기도 하였다.¹²⁾

북한은 一國家一民族이라는 원칙을 항상 주장해 오면서 葛藤을 일으켜 왔다. 물론 南韓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에 對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한이 주도한 갈등의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일방적인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갈등의 原因이 内生이나 外生이나, 혹은 연계적이나 하는 것은 갈등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갈등의 기능이나 성격에 달려 있다. 왈츠는 국가간의 전쟁발발을 심리적 요인, 국가구조적 요인, 국제체제적 요인 등 세가지의 分析水準으로 나누어 본다.¹³⁾ 그는 이 세가지 분석 수준 중에서 국가간의 분쟁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체제의 역학관계라고 보았다.

물론 남·북간의 전쟁과 갈등을 분석하는 데도 이러한 분석수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한의 전쟁과 갈등은 남북분단상황에서 冷戰體制라는 국제체제의 역학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美蘇 대결구조의 한 축소판으로서의 한반도였었기 때문에 強大國들이 여기서 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분단의 固着化에 따른 이념적 대립과 세뇌작용은 상호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하고, 적대적 분리감, 양극화 현상을 야기시키며, 閉鎖的이고 편협한 시각(tunnel vision)을 갖도록 만듦으로써 첨예화한 갈등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현상이 政治指導者들에게 더욱 심각히 나타나 위에서 본대로 지속적인 갈등의 양태로 나타나지 않았

12) 金在德, “北韓統一政策의 戰術的 變容分析”, 李容弼 編著, 「北韓政治體系」(教育科學社, 1985), 428 면.

13) Kenneth W. Waltz, Man, the State and War(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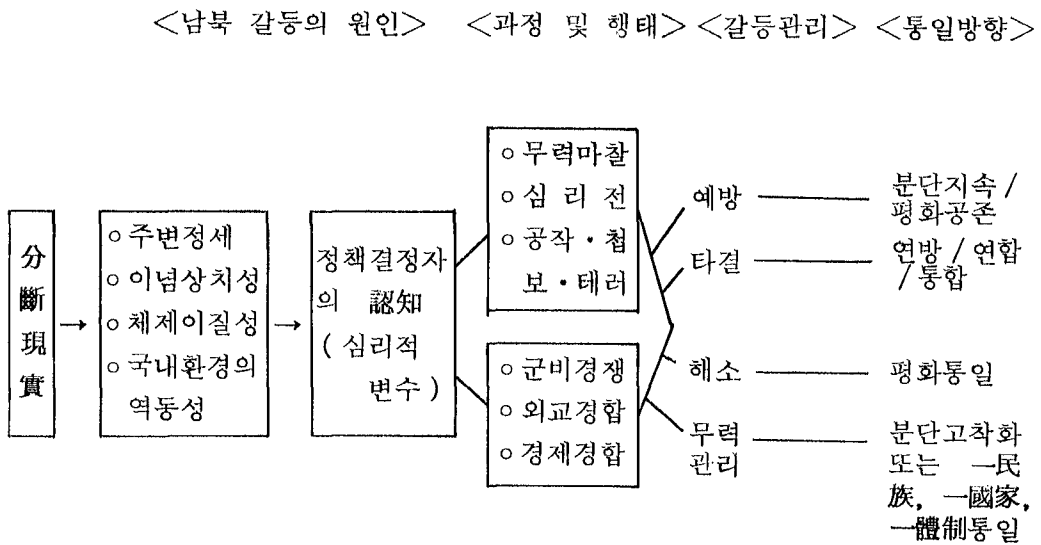
또 국가구조적 요인들도 갈등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南北韓의 政權, 이데올로기, 정부형태 및 경제체제와 성장정도, 인구, 종교, 공업화의 정도, 면적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다. 또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불안정, 對內的 不平等構造, 국가통합의 정도 등이 대외형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⁴⁾ 이같은 국내적 변수들을 南北韓狀況에 적용해 보면 상당한 차이와 갈등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남한의 권위주의 체제 내지 최근의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정치체제의 상이성과 이데올로기적 차이점, 장기적인 社會化過程을 통한 사고방식과 경제행태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더구나 북한의 一國社會主義는 남한의 해방과 사회주의화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은 자본주의와 자유화를 북한에 이식하고자 하는 등의 근본 目的의 차이와 대립 역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 밖에 없다.

國家的 屬性을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것, 즉 인구, 면적, 경제력, 군사력 등의 변수들과 不可視的인 것, 즉 국내정치 및 사회적 안정, 문화적 통합, 정치정향 같은 변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갈등의 당사자가 상대적 국가나 사회의 상황과 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北韓內的 정치적 불안이나 變革의 소리가 심화될 때 북한은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선전공세를 펴곤 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국내적 속성들은 남·북한 갈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4) 이 변수들은 Zinnes, Rummel 등 국가간, 국내적 갈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다루어 온 변수들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표는 문정인교수가 남·북한의 갈등구조에 대한 변수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소개한다.¹⁵⁾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갈등상황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제체제와 정세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정과 行態의 변화를 의미하며 갈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여 어느 방향으로 進展시키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南北韓 갈등과 統一論議 : 종합적 이해



출처: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연구 방향 모색”,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년, 302면.

15)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연구 방향 모색”, 양성철 엮음, 위의 책, 302면.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상호간의 갈등구조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들을 줄여가고 극복해가야 하며, 지혜로운 갈등관리를 통하여 통일의 방향이 設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단과 갈등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민족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미래의 방향에 대한 合意의 도출에도 탄탄한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民族共同體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3. 民族共同體 形成

(1) 共同體의 概念

옛 희랍사람들이 잘 이해했던대로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가장 큰 공동체는 政治共同體 (Political Community)이다. 그 구성원들을 함께 묶는 것은 그 구성원들을 貫通하거나, 주위를 단단히 엮어매는 信念體系, 그리고, 또 다른 공유된 價値들이다.¹⁶⁾ 공동체의 시민들의 기본적 공약수는 그들 상호간, 그리고 그들의 지배자에게 상호의 관계에 관련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그 신념체계들이다. 이러한 함께 나누는 가치체계 없이, 즉 共通性的 基盤이 없이는 政治共同體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아노미의 연구는 政治共同體를 만드는 “충성의 결속”을 약화시키거나 破壞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이다.¹⁷⁾ 이런 의미로 보면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民族共同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공동체란 人間의 本性이 生成, 反映, 啓發되는 일차적 직접적인 생활현장인 동시에, 개체의 자기 확인과 類的 同一視의 근원으로서 人種과 文化를 창출하는 사회생활의 모태이다.”¹⁸⁾ 최근 몇세기를 거쳐 산업사회가 발전되어 옴에 따라 인간의 소외현상이 만연해졌고 전통적인 공동체사회

16) Sebastian de Grazia, The Political Community : A Study of Anomie(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ix.

17) Sebastian de Grazia, 위의 글, 같은 면.

18) 박호강, 공동체 가치의 현대적 실현 가능성”,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엮음, 「現代資本主義와 共同體理論」, (한길사, 1987), 228 면.

(Gemeinschaft)가 쇠퇴해 온 것이다. 이런 현상은 價値變質에 의한 것으로 反共同體價値의 出現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定義된 共同體는 民族共同體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共同體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서로가 공유하고 그 공유함을 통하여 유대가 강화, 유지되고, “類的 동일시의 근원으로서 人格과 文化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民族共同體란 政治共同體 形成을 위한 이전 단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을 관통하거나 주위를 단단히 엮어매는 信念體系”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분단이전까지 공유했던 전통과 언어, 그리고 血緣을 제외한다면 價値, 思考方式, 信念體系와 같은 많은 文化內容을 共有하고 있지 못한 이 시점에서 얼마나 강한 共同體를 이룰 수 있을까, 흥분과 지나친 기대를 留保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民族共同體를 지향하자”라든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자”라든지 하는 當爲論的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겠지만 남북한의 이질화된 價値와 信念體系가 크게 변질되어 공동체라고 느낄 만큼 감정적, 신념적, 사고방식의 유대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南北聯合”, “國家聯合”이란 말이 적절하며 공동체란 말은 사실보다 강한, 실제적이 아닌 假像 내지 當爲的인 언어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2) 異質化된 差異에 대한 認識

오랫동안 한 文化와 傳統을 나누어 왔으며, 같은 血統을 가졌으나, 思想的, 文化的으로 다른 분단상황에서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남북간에는 여러 면에서 심한 異質化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思考方式, 價値, 信念體系, 生活

樣式의 차이가 너무 커서 政治共同體를 향한 民族的 유대를 얼마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韓國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단계로서 民族共同體가 형성되어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信賴를 회복하고 異質化된 南·北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작년(1989) 9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화국 북반부당국, 정당, 단체 연석회의”에서 행한 김영남 외교부장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는 문익환, 임수경 등의 입북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간의 불신과 이질화 현상을 전면 부인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남조선당국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남조선의 이름있는 각계 인사들이 연이어 공화국 북반부를 방문하고 서로의 통일의지와 공동의 노력을 확인한 것은 사실상 북과 남의 인민들 사이에는 적대시하고 대결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른바 ‘민족의 이질화’란 온갖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야의 민주인사들, 학자들과 교수들, 작가, 예술인들과 기자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종교단체등 모든 계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와의 접촉과 대화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떤 法律的, 制度的 구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통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은 감상적인 念願이나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는 남조선 당국도 늦게나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북과 남에

서 제기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은 물론 서로 차이점들도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이 제각기 자기의 통일방안을 내놓고 是也非也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온 거래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 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정당, 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19)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남북의 이질화 현상이 심각함을 느낀다. 특히 “북과 남의 인민들 사이에는 적대시하고 대결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른바 ‘민족의 이질화’란 한갓 허상에 불과하다”고 한 부분은 쉽게 화해되기 어려운 차이를 보여준다. 이질화현상이 있다는 주장과 이질화현상이 없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질화된 것을 뜻한다. 또한, 남한의 인민대중과 자기들 사이엔 차이가 없으나 반통일세력으로서의 남한정부만이 이질화를 내세우고 국가연합의 중간단계를 주장하여 두개의 조선으로 영구분단을 획책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숨意하고 있다. 너무도 우리의 사정에 대해 모르고 異質感을 불러 일으킨다.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혹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사고방식의 차이에서인지 … ?

남한의 “信賴構築 論議”는 相互間의 인정, 각분야의 交流와 접촉,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軍備의 축소, 政治的 統合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19) 로동신문, 1989년 9월 29일자, 康仁德,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北韓의 評價”,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1卷 4號, 1989년 겨울호, 283-4면.

데 거의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구체적인 데서 시작하여 보다 상위 的 包括的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歸納的이고 經驗的인 思考와 論理의 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불가침조약, 군비축소,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조약 등이 이루어져야 信賴가 構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스피리트 訓練이나 군사적 대결을 두고 교섭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信賴가 구축될 수 없다는 사고와 논리이다.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戰略的이고 誠實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어떤 명제나 전제로부터 풀어내려는 演譯的 論理와 思考의 틀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지도자”의 領導下에 命令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즉, 이러쿵, 저러쿵 논의가 필요없는 사회에서 생성된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상대방의 價値와 思考方式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들도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이해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고르바초프가 일방적으로 군비축소를 선언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서방의 지도자들은 두고봐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변해가는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의 틀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같은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價値와 思考와 信念體系를 함께 나누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기란 어려울듯 하다. 북한이 “한민족 공동체”란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학, 예술, 언어, 생활형태, 습관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의 異質感이

많이 있음은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질성은 人性의 차이라고 하겠다. 북한인들은 全體主義사회에서 指示하는대로만 했고 자기들의 주장이나 권리는 내세워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도 없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도 없다. 수령에게 복종만 하면 가난 하나마 세끼는 얻어 먹고 산다는 社會狀況에서 생긴 게으른 타성은 참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한편, 남한의 사람들은 바빠 뛰어 열심히 일하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을 가지고 活氣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落後된 경제상황이 보여 주듯이 북한의 가난도 시키는대로만 하고 自律적으로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集團임은 참으로 이질적 부분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중국, 소련, 동구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주의 사회의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落後된 경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르고, 시간 잘 안지키고, 책임감이 없고, 의욕이 없고, 겉으로는 평안한 듯 하지만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정체된 인민들의 모습이었다. 開放化 이후 自由競爭體制를 도입하여 조금은 변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나 그들의 의식과 습관과 타성이 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북한은 그 나라들 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적 고립과 金父子의 神格化, 主體思想으로 인민을 로보트화 시킨 것, 落後된 경제 등의 원인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북의 발전상에 그 격차가 심화될 것은 너무도 自明한 일이다. 開放하고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지구상에서 가장 閉鎖적인 北韓이고 보면 그 停滯된 사회, 경직화된 정치, 落後된 경제, 퇴행된 문화등 이질화된 남북의 사회상과 인성의 격차는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느리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시키는대로만 하고, 의욕이 없고, 무책임하고 社會主義에서 형성된 타성과, 열심히 일하여 돈도 더 벌고,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는 생각에 과잉경쟁, 과다의욕으로 갈등과 부조리까지 산출해 내는 民主資本主義 환경에서 생긴 人性과는 對話自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融合하여 함께 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適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異質化된 人性은 통일이 되어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貧富의 격차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데 익숙하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살면 나도 열심히 일해서 富해지고, 공부도 많이 하여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으며, 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上向移動이 黨性이나 계급적 성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社會主義社會이기 때문에 思想을 철저히 가지고, 黨과 首領에게 절대복종한다는 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모두가 平等하게 배급받아 가난하게 살아 온 경험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다 잘 살게 되면 그것을 참아 낼 능력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소련에서 이미 경험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노동자나 혹은 다른 弱者를 착취한 결과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私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反社會的이고, 反動的인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방화 이후 소련의 어느 마을에서 한 농민이 열심히 돼지를 길러 팔아 돈을 번 후에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등 생활 제품들을 사다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떼지어 와서 모두 破壞해 버리는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중국에서는 10여년의 개방화의 노력으로 지금은 어느정도의 격차를 생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나 소련에서는 아직도 일반 人民들에게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하여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못살아도 함께 못살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참을성과 관용을 배우지 못하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고와 가치 및 人性의 差異는 대단히 심각한 것일 수 밖에 없다.

(3) 社會的, 文化的 統合과 同質性 回復

民族共同體의 강조는 결국 南北聯合이라는 중간단계를 통하여 남북한이 교류, 교섭, 교환관계를 정립하고 왕성히 함으로써 信賴性을 구축하자는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政治的 統合이 가능해지려면 社會的, 文化的 統合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異質化된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同質性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난 후에야 政治的 共同體로서의 單一民族國家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남북한간에는 너무도 많은 이질성이 생겼다.

그러나 북한도 이런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합하면 사회적, 문화적 통합은 후에 이룰 수 있다는 사고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 이래 지속되어 온 전통적 사고가 아닌가 革命的 수단을 통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구조적, 제도적, 사회적 改革 내지 개조를 한다는 식의 등식이다. 결국 그들의 논리 뒤에 숨은 의미는 政治的으로 統合되면 社會的으로 文化的으로 社會主義化한다는 식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의 인간집단이 共同體로 형성되기 위하여는 文化的 同質性, 집단내

상호간의 접촉, 多面性의 유지, 그리고 그 接觸의 互惠關係의 존재를 들고 있다.²⁰⁾ 民族이라는 대단위의 집단 전체를 기초로 공동체개념이 적용될 때 비로소 民族共同體의 의미가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생긴 差異를 조절하여 共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분야를 보자. 북한은 경직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자유경쟁적 경제운명을 할 줄 모른다. 完全히 국가가 統制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코스트를 줄여 利益을 남겨야 경제성장을 하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價格이 결정되고, 경쟁체제는 사람들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

요사이 중국을 비롯하여 소련이나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開放化한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그들이 바라는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資本主義경제를 운영할 줄 모르고,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경쟁적 市場體制를 발전시키는 데 未熟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北韓의 立場에서는 중간단계에서 한국의 경제운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市場經濟를 받아들여야 북한의 後進的이고 落後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眼目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를 強化시키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統一協商에도 유리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의 추세로 보아 社會主義의 경제체제로서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둘째,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예술은 연극, 가극, 영화, 시,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김일성, 김정일의 革命 업적을 찬양하고 偶

20) 金宗林,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國土統一院, 1989), 255-6 면.

像化를 소재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人間, 社會, 世界, 家庭과 같은 소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남한의 예술문화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폭넓은 소재와 예술성을 살리려는 시도에서 발전해 왔다.

북한의 주요작품들은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계급성, 革命性, 정치성 이념을 기초로 해서 폭력혁명과 계급투쟁을 부각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물론 계급성, 혁명성 등은 金日成의 ‘주체사상’이라는 외피 아래 미화되어 있다.”²¹⁾ 라는 말 그대로이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계급성, 혁명성, 김부자 세습제 확립 등의 이념과 정치성 위주로 되어 있다. “1987년 2월 24일 平壤에서 개최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창립 40周年 기념 보고회의에서도 북한은 ‘영화창작가 예술인들은 영화창작에서 주제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方針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우리식의 혁명적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특히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해야 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²²⁾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북한은 金日成, 金正日 세습체제 확립 및 그 합리화와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계급교양강화라는 선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명·전통주제 작품 및 對 한·미 모략 비방 내용의 작품등을 많이 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²³⁾

21) 한국비평문학회, 「북한 가극·연극 40년: 5대 성과작을 중심으로」, 신원문화사, 1990. 머릿말, 이외에도 임채욱, 「서울문화 평양문화」, 신원문화사, 1989. 등의 서적들을 참조.

22) 최척호, 「북한예술 영화」, (신원문화사, 1989), 321면.

23) 앞의 책, 같은 면.

북한 사람들의 우리 영화에 대한 시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 ‘반동적’ 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제와 내용면에서는 ‘숭미 사대주의 고취, 반공 선전과 사회주의제도 모략, 황금만능주의·리기주의·인간중오사상의 팽배, 부화방탕풍조 만연’ 등이며 ‘형상 수법면에서는 자연주의와 형식주의적 방법에 기초한 생활의 본질 왜곡’ 등으로 보고 있다. … 6.25를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우리의 전쟁물을 반공선전을 위한 작품, 혹은 사회주의 제도를 헐뜯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비난하고 있다.”²⁴⁾

이렇듯 예술분야의 시각차이와 그동안 작품들의 이질화는 대단히 심화되어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南韓의 종교적 주장들에 副應하여 外面的으로 宗教가 있는 것으로 僞裝하여 訪問客들을 속이고 있다. 최근 두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중앙일보의 金讚三기자는 그의 방문기에서 평양의 봉수교회에 갔던 일을 썼다. 한달 기간동안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가 보았는데 목사님과 집사만 같은 사람들이고 참석하는 敎人들은 매주 다른 사람들이었으며, 기도할 때나 감격스런 장면에서 “아멘-”하고 말하는 모습도 실제 교회의 敎人들처럼 감격에 넘쳐서 하기보다는 감격함이 없이 거짓으로 소리지르는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追窮質問을 한 결과 교회에 한번 나가 예배를 보면 직장에서 하루 쉬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²⁵⁾

재미, 재유렵 동포들이 빈번한 방문에 즈음하여 북한에도 종교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僞裝이 여기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묘향산 보현사의 스님도

24) 앞의 책, 316-317면.

25) 김찬삼, 「중앙일보」, 1990년 10월 10일자.

가짜라는 말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사실이다.

“1959년에 정하철이 썼다는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라는 反宗教 活動 指針書가 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반종교 활동의 이론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종교는 착취계급들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유력한 정신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로자들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는 來世를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무관심성, 현실 도피적인 사상에 젖게 하고, 착취계급들에게 복무하면서 평범한 근로대중을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는 대중의식 속에 무기력하고 타락된 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지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과 투쟁을 방해하여 전진운동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하여는 종교의 殘滓를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닦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약소국가 인민들의 계급 및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종교의 탈을 쓴 선교사를 이용하여 간첩암행 활동을 감행하여, 종교를 반공전선과 노동운동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 데 동원시켜 왔다는 것이다.²⁶⁾

26)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민족문화사, 1989), 84-85면.

이 외에도 북한의 반종교적 문헌과 연설문, 사진, 백과사전 등 많은 자료들이 이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남한의 宗教의 自由와 그동안 여러 종교들의 성장 및 종교들간의 連繫性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종교말살 현상은 민족적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金日成을 神格化하여 ‘살아 있는 神’에 대한 광신적 교도로 북한인민 전체를 教化시켜 왔다.

남·북의 社會組織과 階層構造 및 권위구조로 대단히 이질화되어 왔다.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간과정을 통하여 統攝되지 않으면 안된다. 南北聯合, 곧 民族共同體 形成 기간은 통일로 가는 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政治共同體로서의 統一國家形成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4. 國民的 合意의 導出

(1) 合意導出의 現況

북한의 통일방안과 선전에 對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合意하는 統一方案의 정립은 앞으로의 남북회담이 계속되는 데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된다.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實用的 통일안이나 政策이 될 수 없다. 統一이란 특수한 계층이나, 集團이나 個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民族全體의 事件이요 이해가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南北韓이 合意하기 전에 韓國國民들이 먼저 合意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합의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주요 關心事이다. 정부가 지난 2년동안 여러가지 方法을 통하여 확인된 合意事項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첫째, 통일은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統一을 위하여서는 南北이 제반분야의 交流, 協力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셋째,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북한 서로의 存在를 認定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出發해야 한다는 점. 넷째, 민족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은 統一國家의 未來像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통일은 자주·평화·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통일방안 입안과정은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엮어 체계화하느냐 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⁷⁾

27) 이흥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 「한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國土統一院, 1989), 17면.

또 統一院資料에 의하면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250 회에 걸친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계 각종의 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고, 국회의 통일특위에서의 공청회를 통해 정치권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426 건의 통일관련 논문, 서적, 논의, 주장 등의 문건들을 취합, 분석, 정리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6천 8백여명의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였다고 하였다.²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방법을 통한 여론의 結集에 따라 이루어진 종합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에 의하여 왜 國民投票에 붙이지 않았나 하는 점과, 국회의 可決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가열되어 反體制的 집단들의 투쟁의 場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방안이 국회에서 可決되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없으며 또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과 코스트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²⁹⁾ 사실 국회가 결의하는 것도 4당의 분열과 경쟁체제 속에서는 주장이 난립하여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주요한 정책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나 국회의결 절차를 갖는 것은 습當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절차는 훗날 남북과의 협상에서 마지막 단계로 진입할 때에 취해질 것이며, 현단계에서는 이흥구씨의 논의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28)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 해설자료> 1989, 6-7 면.
간담회·세미나 : 총 250 회, 2,304 명, 설문조사 : 총 16,801 명 : 논의·논조
분석 정리 : 총 426 건 등의 통계자료의 상세한 내역을 쓰고 있음.

29) 이흥구, 위의 글, 18 면.

(2) 輿論과 弘報를 통한 合意

토크빌은 輿論의 壓力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론의 압력에 직면하여 대통령은 관심을 더이상 국가에 두지 않고, 자기의 재선거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여론의 좋은 점과 惡意的인 점을 채택하고, 여론이 희망하는 바를 기대하며, 여론이 불평하는 것을 미리 막으며, 여론이 가장 가치없이 여기는 것을 포기한다.”³⁰⁾ 사회가 自由化되고 平等化될수록 여론의 힘이 커지고 상당한 壓力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여론형성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선동이나 인기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大衆心理를 반영하는 것이기 쉽다. 集團活動에 참여하는 群衆들은 시대를 초월한 요소들로부터 그 힘을 끌어내기도 하고, 시대정신에 연유하는 요소들로부터 그 힘을 끌어내기도 한다.³¹⁾ 이런 맥락에서 여론이 유행일 수도 있다.

여론의 확산을 위하여는 大衆媒體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 爭點을 둘러싼 贊·反의 경우라도 言論媒體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向方이 정해지는 것이다. 특별히 권위있는 일간지나 TV의 보도는 여론의 向方만이 아니라 支持度 그리고 반대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大衆媒體에

30)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Ed. Phillips Bradley, trans. Henry Reeve, 2 Vols., New York : Alfred A. Knopf, 1948), 1 : 138 면.

31) 에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 지음, 이태건·방영준 옮김, 「輿論의 政治社會學」(文佑社, 1990), 160 면.

爭點으로 많이 나타나면 주요한 문제라는 輿論이 형성된다.³²⁾(圖表1을 참조).

대중매체가 그 쟁점의 중요성과 적합한 방향에 대해 보도한다면 많은 경쟁적 입장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매체의 입장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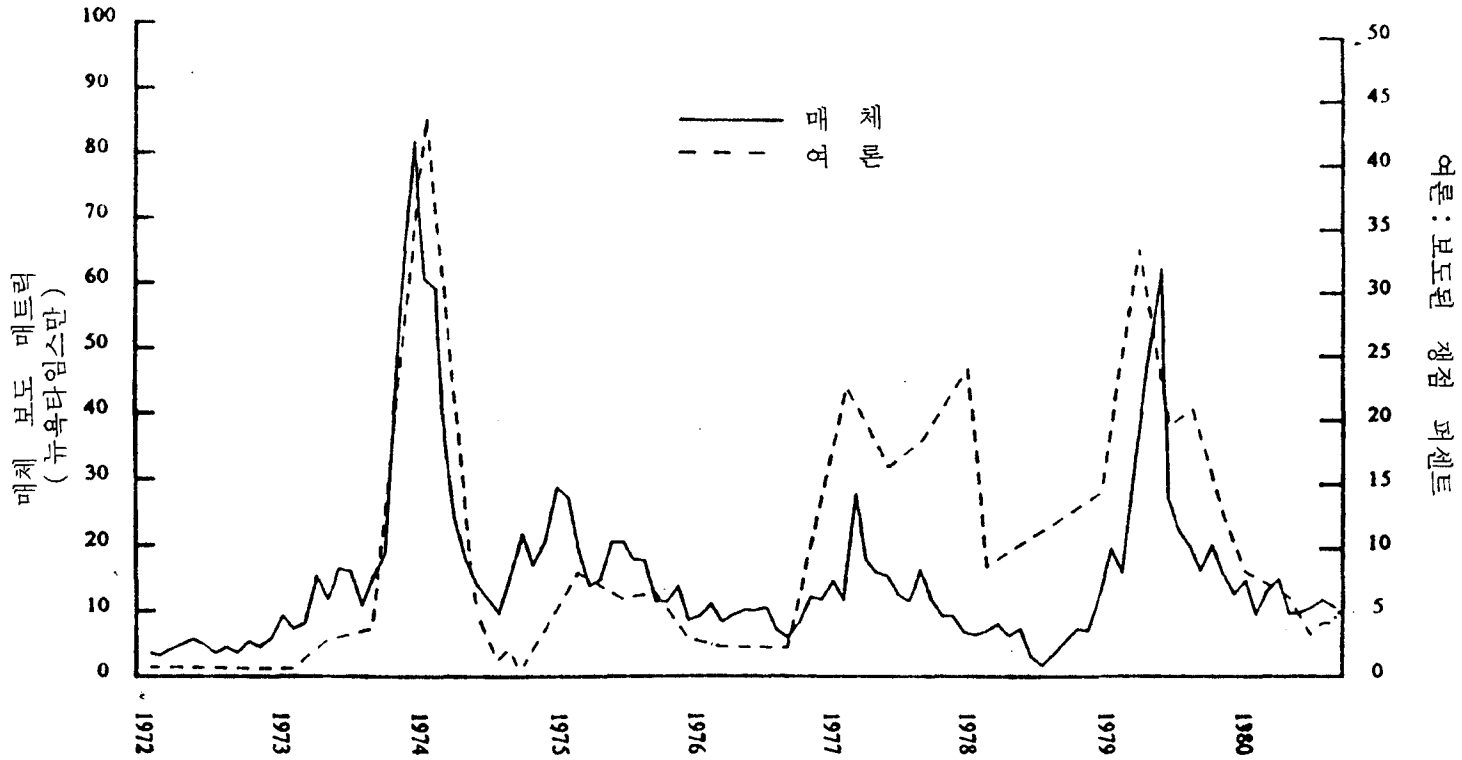
大衆媒體는 국민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무엇을 생각하라는 데는 반드시 성공적이 아닐지 모른다.³³⁾ 쟁점에 대하여 즉, 그 시기의 社會的, 政治的 이슈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대중매체가 얼마나 중요히 다루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方向性에는 大衆媒體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라도 걸러 낼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으며, 과장할 수도 있고, 다듬어 세련되게 할 수도 있다.³⁴⁾

여기서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統一院에서 그동안 수렴하여 도출해낸 좋은 합의들과 資料들을 주요 매체들을 통하여 과감히 國民들에게 敎育하고 弘報한다면 더욱 확고하고 공고한 여론의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統一이라는 맹목적인 熱氣에다 동시에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내용과 北韓의 統一方案이 지니는 모순과 비현실성 및 不適合性을 쉽게 이해하도록 弘報

32) W. Russell Neuman, "The Threshold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Summer, 1990, pp.161-163

33) Maxwell E. McCombs and Donald L. 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1972, 36 : 177.

34) W. Russell Neuman, 위의 글, 161면.



출처 : W. Russell Neuman, "The Threshold of Public Atten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Summer, 1990.

도표 1. 에너지 위기의 정치적 돌출성; 매스컴 보도와 여론의 상호작용

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國民的 合意를 導出해내는 效果的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방안 자체가 群衆心理나 流行의 와중에서 필요없는 논쟁이나 말장난에 휩쓸려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統一思考를 건전하게 유도하고 탄탄한 지지기반을 쌓아야 할 것이다.

5. 結 論

통일의 열기와 병행하여 우리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역사, 그리고 분단상황에서 지속되어 온 葛藤의 構造와 양상에 대한 심도깊은 研究와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낭만적인 견해와 當爲論적인 주장만으로는 건전하고 合理的인 미래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분단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냐, 6.25와 같은 戰爭과 이후에 계속된 葛藤現狀은 미래에 어떤 含意를 가지고 있는가. 지속되어 온 갈등의 양상이 심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면서 왜곡되고 편견적이고 일방적이었음을 논하였다. 남북한 간의 正統性에 대한 是非도 앞으로 심각하게 연구하고 밝혀 봐야 할 문제이다.

政治共同體로서의 統一國家를 이루기 위하여는 民族共同體形成을 이룩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異質化된 남북이 理念的, 思想的, 人性的, 價值體系의 차이를 어떤 과정으로 統合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政治, 經濟, 社會, 文化, 人性등 모든 분야에서의 分斷과 異質化의 골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류와 교섭을 통한 信賴回復, 同質性回復의 단계가 없는 통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무리한 통일은 보다 더 고통스런 미래를 가져오리라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한다.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려면 먼저 한국 국민들간의 合意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여러가지 方法으로 合意 導出作業을 해 왔다. 앞으로는 보다 더 효과적인 敎育과 弘報를 통해 합의사항을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보다 더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어진 주제영역에서 현재 政府가 진행하고 있는 統

一方案과 接近法은 적절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고려가 부족한 統一思考는 도리어 위험스럽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統一을 念願하지만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國民的 合意를 形成해 가는 점증적 과정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단상황과 갈등의 역사가 심각했고 아직도 북한의 思考나 態度의 變化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遇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인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北韓의 評價”, 國土統一院, 「통일문제연구」, 第1卷4호, 1989년 겨울호.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민족문화사, 1989).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기본 해설자료〉, 1989.
- 金在德, “北韓統一政策의 戰術的 變容分析,” 李容弼 編著, 「北韓政治體系」, (教育科學社, 1985).
- 金宗林,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國土統一院, 1989).
- 김찬삼, 「중앙일보」, 1990년 10월 10일자.
- 김학준, 「한국전쟁」(박영사, 1989).
- 리차드 카간·마태오 :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 송철복의 역, 「북한의 인권」(고려원, 1990).
-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양성철 엮음.
- 박호강, “공동체 가치의 현대적 실현가능성,”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엮음, 「現代資本主義와 共同體理論」, 한길사, 1987.
- 裴燦福, 「南北韓의 政治社會化-基本理論과 政治教育變遷過程」(法文社, 1989).
- 시사논평(1988년 3월호), 11호.
-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에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 지음, 이태건·방영중 옮김, 「輿論의 政治社會學」(文佑社, 1990).
- 이동희, 「한민족 공동체론」(법문사, 1988).

이흥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國土統一院, 1989).

임채욱, 『서울문화 평양문화』(신원문화사, 1989).

제임스 I, 매트레이, 구 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을유문화사, 1989).

최척호, 『북한 예술 영화』(신원문화사, 1989).

한국비평문학회, 『북한가극·연극 40년 : 5대 성과작을 중심으로』(신원문화사, 1990).

한국비평문학회, 『혁명전통의 부산물』(신원문화사, 1989).

Azar, Edward, Protracted Social Conflict

(College Park, M.D.: CIDCM, University of Maryland, 1988).

Cumings, Bruce(ed),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De Grazia, Sebastian, The Political Community : A Study of Anomi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ix.

De Tocqueville, Alexis, Democracy in America

(Ed. Phillips Bradley, trans. Hensy Reeve, 2 Vols , New York : Alfred

A. Knopf, 1948).

Matray, Zames K., The Reluctant Crusade : American-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McCombs, Maxwell E., and Donald L. 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1972.

Newman, W. Russell, “The Threshold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Summer, 1990.

Pelz, Stephen, "Decisions of Korean Policy,"

Cumingo, ed., Child of Conflict.

Sandusky, Michael C.,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 Old Dominion Press, 1983).

Waltz, Kenneth W., Man, the State and War

(N. Y.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社會主義體制的變化와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朴弘圭
(外交安保研究院)

目 次

1. 머리말	73
2.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	75
(1) 소련의 침체된 경제	75
(2) 과학기술의 낙후	77
3. 사회주의권의 변화	80
(1) 자유화	80
(2) 민주화	81
(3) 개방화.....	84
(4) 탈냉전화	86
4.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89
(1) 탈이데올로기화	89
(2) 중국과 소련의 화해	90
(3) 북한의 변화가능성	92
5. 한국의 평화노력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96
(1) 한국의 평화노력	96
(2)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98

1 . 머 리 말

1990년 9월 3일은 한국분단사에서 획기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의 강영훈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울에서 만나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킨 날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처음 열린 남북한 총리 회담은 예상했던 바대로 특별한 성과없이 끝나기는 했어도 다음달 다시 평양에서 만나기로 하는 등 만남 자체는 물론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정부책임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이처럼 성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우선 국제정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해 온 결과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던 공산당 일당독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순간에 처해 있으며, 미국과 소련은 89년의 몰타미소정상회담 이후 전후 냉전시대의 대립을 지양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제질서를 신데탕트체제로 바꾸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사회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여 내부적인 경제침체와 과학기술의 낙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화·민주화·개방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소련의 변화는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독일민족의 소원인 독일통일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쳐, 이데올로기적 냉전의 기류가 불식되고 점차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정세와 변화가 곧바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로 이르지 않는다는 점, 주체적인 노력이 없이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 꾸준히 추진해 오던 한국의 북방정책이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국가들의

인식이 변함에 따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고, 나아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었던 소련과의 외교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동북아 6자 평화회의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제안은 북한으로하여금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끔 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배경과 “자유화·민주화·개방화·탈냉전화”라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개괄하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정리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2,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

(1) 소련의 침체된 경제

소련경제는 스탈린이 계획경제를 도입한 1930년대에는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50년대에는 6%, 60년대와 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5%,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반에는 3%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 결과 소련경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이는 소련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자신감마저 위협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같이 소련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원인은, ①내포적 성장단계로의 이행, ②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부적합성, ③중공업우선정책의 한계, ④관료주의적 병폐, ⑤과다한 군사비 지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70년대 이후 소련경제의 발전단계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development) 단계에서 질적 향상이 관건이 되는 내포적 성장(intensive development) 단계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70년대부터 나타난 소련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규노동력의 대폭 감소로 더욱 심각해졌으며, 손쉽게 개발될 수 있는 자원 또한 상당부분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소련경제는 이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풍부한 자원, 노동력 및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던 외연적 성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으며, 생산성제고를 통한 내포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점에 소련경제는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소련경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

적인 경제침체에 당면하게 될것이다.

둘째로, 80년대 초반까지도 소련경제의 골격은 1930년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도가 제한적인 자원을 중공업 중심의 기간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기업의 수효도 적기 때문에 계획의 입안, 집행, 감독이 순조로웠다는 점 때문에 급속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수효도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내용과 기업간의 상호관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직접통제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팽창하게 되었고, 소련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점차적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셋째로, 스탈린의 자력갱생노선으로 소련은 자주경제의 기초구축과 군수산업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중공업 우선정책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경제는 자원을 자본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소비재 부문에는 그 잔여분을 할당하였으며 이러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비재산업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양적 소비충족이 요구되던 단계에 있던 당시의 소비자들은 조악한 상품이라도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의 소비재 시장이 과거의 양적 공급 부족상태에서의 공급자 시장에서 양적 공급이 해결된 상태에서의 질적 선택이 확대되는 소비자시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낙후된 소련의 소비재산업은 소비자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노동의욕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 것이다.

넷째로, 관료주의적 병폐를 들 수 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은 피상

적인 개인우상화 비판에 그치고, 보다 근원적인 관료주의 병폐문제를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의 탈스탈린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브레즈네프 말기에 이르면 관료적 나태와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노동기율도 문란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나친 중앙집권화 및 경직된 행정체계와 타성적이며 독창성을 결여한 관료주의의 병폐는 경제계획의 입안, 집행, 감독에 있어서 효율성을 감소시켰을 뿐만아니라 경제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끝으로,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소련경제의 침체를 가중시켰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의 15-17%에 달하고 소련의 과도한 군사비지출은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국가재정 중에서 경제, 사회개발부문 또는 복지부문을 축소시켰고, 경제생활에 긴요한 민간생산재의 생산을 위축시켰으며, 기술혁신의 진전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특히 군사부문에 대한 강조는 민간경제부문에서 기계설비의 개선과 대체를 저해하여 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술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소련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2) 과학기술의 낙후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일차적이었다. 그러나, 가게 앞에 늘어선 소비자의 긴 행렬을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다. 사실상 소련의 생활수준은 느린 속도이지만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소련인들은 오랫동안 줄서는 일에 만성이 되어왔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2-3%의 경제성장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의 침체가 과학기술의 낙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련공산당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자신들이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왔으며 서구사회를 따라잡고 있다고 믿어왔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 소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러시아 애국주의의 영향도 크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낙후된 현실이 발견되었을 때 소련사회는 심각한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소련공산당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의 낙후는, 사회주의만이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능케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퇴색시켰다. 경제성장율을 서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자본주의권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소련식 경제발전 모델이 전자·컴퓨터산업 등의 첨단과학기술 시대에는 더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과학기술의 낙후는 소련의 외교정책에도 중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공산당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었으며 급진적인 혁명이 발발했던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는 국가의 정치는 점차 우경화되고, 심지어 중국이나 모잠비크, 나야가 베트남까지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소련식 경제체계가 과학기술발전에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델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과학기술의 낙후는 군사력의 약화와 직결된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재래식무기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중국까지도 개방정책을 통해 과학기술개발과 무기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 역시 재래식무기의 현대화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군사적 후진국으로 뒤쳐질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의 과학기술이 절대적으로 서유럽국가보다 뒤떨어져 있을 뿐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등 미국의 대소 봉쇄에 막혀 점차 불가능하게 되자 소련의 기존안보정책도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같이 과학기술의 낙후는 소련사회의 여러 방면으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나게 되었으나 소련공산당과 관료들은 브레즈네프 시대의 타성에 젖어 현상유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경제침체와 과학기술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가히 혁명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는 페레스트로이카란 이름으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사회주의체제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전후 냉전의 세계질서는 ‘화해와 협력’의 신데탕트체제로 변하게 된 것이다.

3, 사회주의권의 변화

(1) 자유화

고르바초프는 “인민의 자율성·경쟁·창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인적 에너지의 동원」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주의·인본주의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침체된 소련경제를 회복시키고 낙후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억압적인 사회질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시작된 자유화·인간화의 물결은 소련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선 소련에서는, 언론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견해와 사상이 표출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이에 고무된 시민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각종의 시위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90년 6월에 채택된 소련공산당의 신 강령에는 “사회적 발전의 중심에 인간을 둔다. 인간의 충분한 생활과 노동의 조건, 사회적 공정, 정치적 자유, 전면적인 개인의 발전과 정신적 개화에 의해 사회의 진보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주거와 재산, 편지 및 전화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 시민의 정치적 권리의 발전과 강화,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자유화 물결은, 87년 11월 4일 고르바초프가 ‘불세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연설'에서 공산권의 공동번영과 사회주의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혁·개방정책에 동유럽 국가들이 동조할 것을 촉구하고 동맹국의 정책에 소련이 간섭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이후 동유럽으로 강하게 퍼져나갔다. 일찍부터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공산당에 대항해서 싸워왔던 폴란드의 경우 자유노조가 중심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헝가리 인민들은 집권사회주의 노동당을 해체하고 국호까지 바꾸는 체제변혁을 단행하였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를 처형하였고, 동독의 100만 시위대는 공산당 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 나아가 체제비판까지도 허용되고 있으며,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정책의 중심이라는 사고가 정착되고 있다.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더이상 인민의 생각과 유리된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비로소 보장된 것이다.

자유화의 물결은 동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몰아쳤다. 그러나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발만을 추구해온 중국공산당 정부는 '천안문 사태'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화의 물결이 불가피한 역사적 추세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2) 민주화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되어 기술발전, 경제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소련의 개혁추진세력은 일차적으로 당과 국가를 분리하여 국

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화국의 자치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복수후보제를 법제화하였으며, 최근에 개정한 공산당의 강령에서는 복수정당까지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화과정이 정치적 민주화과정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복수정당제와 자유총선거를 법제화함으로써 공산당 일당독재를 종식하였는가 하면 몇몇 집권공산당은 당명까지 바꾸었고 동독,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

89년 6월의 폴란드 총선거 결과 자유노조가 신설된 상원의 100석 중 99석을, 그리고 재야계의 하원의석 161석을 모두 차지하여 자유노조가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새 수상으로는 자유노조의 기관지 편집장을 지냈던 마조비에츠키가 선출되었다. 최근 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웬사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총선에서 패배한 폴란드 공산당은 파산을 선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집중제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은 포기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언론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의 신강령을 채택할 정도로 변질되었다.

90년 3월의 헝가리 총선거 결과도 중도우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 사회주의 노동당이 스스로 스탈린식 통치원칙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당을 해체하고 사회민주주의를 기조로 새로운 사회당을 창당하는 등 자기 개혁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선거결과 좌파 정당들은 몰락하였고 중도우파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헝가리 민주화 운동의 구심이었던 민주포럼 출신의 요셉 안탈 총리가 독립소지주당, 기독교민주국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89년 11월에 발생한 5만 군중이 참가한 민주화

시위가 공산당 지도부를 굴복시킴으로써 민주화가 성공하였다. 곧이어 공산당 지도부가 해체되어 진보세력이 당권을 장악하여 비공산당원이 각료에 임명되는 개각이 단행되었으며 대통령에 시민포럼의 하벨이 취임하였다. 9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하벨이 이끄는 시민포럼이 압승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체코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한편 불가리아의 경우 집권 불가리아 사회당 내부의 개혁과 이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 동조로 90년 6월의 총선거에서 변모한 불가리아 사회당이 승리하였다. 반면에 끝까지 스탈린주의를 고수하였던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권은 유혈내전의 결과 붕괴하였고 차우체스쿠는 처형당하였다. 그후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내전을 수습하여 개혁이 추진되었고, 90년 5월의 총선에서 일리에스쿠가 이끄는 구국전선세력이 압승하였다.

유럽의 분단국이었던 동독의 경우는 민주화의 과정이 통일의 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었다. 수십만 동독인에 의한 ‘서독으로의 탈출’ 사태와 개혁요구 군중시위의 결과 집권 사회주의통일당(공산당)은 당명까지 바꾸면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90년 3월의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의 연립내각에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독일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어 7월에는 금융통화체계가 통일되었고, 8월에는 동서독간의 통일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제 국제적인 승인과 동서독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은 동시에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고취하였다. 소련은 126개의 크고 작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의 과반수는 1억3천만 이상의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인을 제외한 민족들은 제정러시아 때 이 민족으로 취급되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오다가 볼셰비키 혁명정권이

등장한 이후 민족동등권정책의 채택으로 어느 정도 차별대우가 해소되었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대러시아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소수민족들은 자의적인 해체, 강제이주, 재판성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근래에 고르바초프의 민주화정책과 더불어 그동안 쌓였던 민족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 3국은

1939년 히틀러-스탈린 사이의 비밀협정에 의한 소연방 편입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자치권의 확대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앙러시아의 카자흐공화국·우즈베크공화국·그루지아공화국·몰다비아공화국·아르메니아공화국·아제르바이잔공화국 등지에서도 계속적인 민족분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유럽에서도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공화국에서 인종 시위가 발생하는 등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티베트민족의 자치권 요구시위가 유혈사태로까지 발전하였고, 외몽고에서도 탈소민족주의의 새바람과 더불어 독자적 개혁개방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3) 개방화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유화와 민주화의 기틀을 세우는 동시에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경제발전,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와 경제의 개방화가 필요함을 인정한 고르바초프는 생산수단의 임대,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 기업의 이윤 보장, 가격의 자율적 결정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노동자에 의한 기업장의 직접선출, 노동기여에 따른 임금지급 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하였으며, 협동적 생산과 소비활동이 장려되었다. 동시에 토지, 가축, 기계, 건물, 설비 등에 대한 임대가 승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지에 대한 사유제

까지 추진되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소련은 대내적으로 광범위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87년 이후 기업에 대하여 자본주의권과의 교역과 합작을 허용하고 교역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내에 경제특구를 신설함으로써 자본주의권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련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를 개방함에 발맞추어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었으나 국내정치체제의 전체주의 성격과 미소의 냉전체제 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자노선을 주장하면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해오던 유고슬라비아 외에도 이미 폴란드는 81년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86년에는 과감한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였다. 헝가리도 68년부터 경제개혁정책을 시작하였으나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왔었다.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 정치개혁과 동시에 더욱 활발히 경제의 개방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서방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와 기술개발협력에 성의를 보이게 되었다.

최근들어 알바니아도 과거의 고립노선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90년 2월 알바니아는 이례적으로 외국투자를 환영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합작투자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알바니아 경제정책 입안자인 파토스나도는 40년에 걸친 스탈린주의적 중앙계획통제 방식에 의한 경제운영이 실패하였음을 실토하고 이를 개혁함으로써 경제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중국은 소련의 개혁 이전부터 독자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현대화를 향한 '새로운 장정'을 시작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는 중국은 1980-87년 사이 1인당 국민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7%를 상회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GNP를 기록하는 등 경제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체제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이러한 개방정책의 결과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제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시장형 사회주의'가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초래하고 자본주의의 복고 위협성을 초래한다는 논리 하에서 계획경제, 자립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도 일부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변화에는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탈냉전화

소련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인 과중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과감한 탈냉전의 평화공세를 취했다. 86년 2월의 제 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고(新思考)'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하는 신사고는, 핵전쟁의 무의미성과 국제사회의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고르바초프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므로 인류는 이를 피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계급대결에는 객관적 한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평화공존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고르바초프는 세계질서가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각 나라의 독자성이 존중되는 협력과 공존의 국제질서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주장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다. 소련의 내부개혁은 필연적으로 외교관계의 변화, 특히 체제경쟁의 종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사고에 입각하여 소련의 안보개념은 절대안보 (absolute security) 개념에서 상호안보 (mutual security) 개념으로 바뀌었고 군사전략도 방어충분성 (defensive sufficiency)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변화된 대외정책에 입각해서 고르바초프는 86년 10월의 레이카비크 미 소정상회담에서 종래의 주장에서 대폭 양보하여 중거리핵전력 (INF) 의 완전폐기에 동의하는 등 군축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을 철수하였고,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와 앙골라 주둔 쿠바군의 철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독의 개혁과 독일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냉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데탕트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89년 12월의 몰타 미소 정상회담은 미소간에 새로운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미소의 협력관계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소의 대응과정에서 유감없이 표현되었으며, 독일의 통일은 탈냉전시대의 귀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미소의 탈냉전화는 곧바로 유럽의 국제정세를 변화시켰다. 유럽에서 미소 양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인들은 더이상 공산주의의 침략이나 제국주의의 도발을 우려하지 않게 되었고,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전유럽이 점차 통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몰타회담에서는 미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와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의 변화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몰타회담에서 NATO 의 WTO 의 장래와 관련하여 소련은 현 군사동맹체로부터 정치-군사기구를

거쳐 궁극적으로 정치적 동맹체로 전환시켜 나갈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NATO의 약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미소 양국은 그것이 유럽 전체의 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협의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소련은 동구권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확인하고 동구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의 자유권을 인정한 한편 미국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미소간의 탈냉전화가 유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반면, 동북아에는 아직 뚜렷한 국제질서의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탈냉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1) 탈이데올로기화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미소의 신데탕트 시대의 개막은 동북아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냉전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탈이데올로기화 현상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더 멀리서는 미국의 월남전 개입정책의 재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반전운동 등 극심한 국내적 요구와 대외적인 국가능력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에서 미국은 대공산권 강경 이데올로기 노선인 봉쇄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닉슨행정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직접적인 군사부담을 덜기 위해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수정된 정책노선으로 초래된 아시아에서의 자국 영향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지역안보 역할의 재고를 요구했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국의 외교정책은 더이상 종래의 보수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둘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일련의 정세변화로 레이건 행정부는 소위 ‘신보수주의’라는 이름하에 다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한 듯했으나, 부시가 새 대통령이 되면서 대소 전략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강경한 반공이데올로기 외교노선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탈이데올로기화를 본격화시킨 것은 역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신사고 (novoe myshlenie)’로 표

현되는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노선은 교조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핵전쟁의 위협하에 있는 인류생존의 현실적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에는 적으로 규정되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평화공존 그리고 상호교류 협조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 노선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87년 말 소련이 미국과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88년 12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소련군의 50만명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곧이어 헨리 키신저, 지스카르 데스탱,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선진 국가 수뇌들과의 회담에서 소련의 국방예산을 14.2% 줄이고 무기·군수물자 생산도 19.2% 삭감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인 몽고에 주둔한 소련공군부대를 포함하여 약 20만명의 병력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은 약속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군을 완전 철수시켰으며, 동유럽의 소련군 철수와 더불어 몽고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시작하였고, 89년 5월의 북경연설에서 극동군 12만명의 감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소련의 탈이데올로기적 평화정책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동북아 국제정세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워싱턴 한소정상회담 이후 더욱 확대된 한·소무역 교류와 영사처의 설치 및 항공협정을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소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은 동북아의 탈이데올로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 중국과 소련의 화해

미소 데탕트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화해 역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중소 양국은 88년 12월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의 소련방문에 의해 이루어진 양국 외무장관 회담과 89년 2월 초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중국방문에 이어, 동년 5월 16일에는 30년전 모택동과 흐루시초프가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처음으로 양국지도자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1950년대 말부터 지속되어 왔던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 1981년부터 이미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관계를 개선시켜 온 중소 양국은 경직과 이데올로기보다는 실리주의에 의거한 경제개발 정책을 국가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하여 왔으며 상호 화해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과 기술 및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 화해는 양국의 경제적 공통이익의 도모라는 측면과 함께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중소 화해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의 실천에 해당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전략적으로는 대중국 화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도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1970년대말 이래로 진출하지 못했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산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소련이 대중공 화해를 추진한 배경에는 실제로 반소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일·중의 3각협력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소련에 대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중국에 있어서도 대소 화해는 중국이 미·소와 더불어 대등한 3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세력(World Power)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데, 1982년 독립자주 외교노선으로 표명된 대 미·소 등거리 외교원칙이 이번의 중소 화해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 화해는 비록 양국 정상들이 “정부 대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 대 당의 관계도 정상화한다”고 선언했을지라도 장차 과거 1950년대 초와 같은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서로 독자적인 세계세력이라는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행동할 것이다. 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중소 화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①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역할의 증대, ②중국·소련·북한의 북방 3각관계의 변질, ③북한측의 대외적 태도 변화 촉진, ④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유도, ⑤중국과 소련이 북한의 시선에 덜 주의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소련에 비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수립에 매우 소극적이며, 계속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더욱이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이후 국내 보수세력의 개혁에 대한 저항감이 고조됨으로써 급격한 대외정책의 변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한·중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외교노선이 재조정 정립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3) 북한의 변화 가능성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가 국내경제의 침체와 과학기술의 낙후에서 비롯되었듯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경제는 계획된 목표대로 성장할 수 없었으며, 70년대 들어서는 대외교역의 결과

외채까지 증대하여 북한 경제를 압박하였다. 더우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북한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되어왔다.

이러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도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진행시켜왔다. 1980년 10월의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는 소위 ‘10대 전방 목표’를 발표하여 당시까지 수출해 오던 철·비철금속·화학비료·시멘트·수산물 등의 수출잠재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는 등 대외무역의 확대와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 국가들, 불럭 가담 국가들을 비롯한 우리나라(북한)에 호혜평등 원칙을 존중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개진하였다.

북한은 나아가 84년에 ‘합영법’(합작회사 운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북한 내에 상당수의 합영회사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무역량 중에서 중립국가들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교역량이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5년부터 1989년 4월까지 북한에 설립된 합영회사 총수는 46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29개가 일본의 조총련계 상공인들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선진기술부문의 합영회사 설립은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국내적으로는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경제개혁과 대외적으로는 기술도입을 위한 개방조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기술개혁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초래’하고 ‘자본주의 복고의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여전히 ‘집중적·통일적 지도를 통한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고수정

책은 국제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키고 있으며, 한·소 정상회담과 최근의 수교로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례적으로 90년 9월 2일과 3일에 걸쳐 열렸던 북한과 소련의 외무장관회담에서 소련 측에 전달했다는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조선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는 논평을 게재한 사실은 북한의 위기 의식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한·소 외교관계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 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공동음모에 가담, 3각결탁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라고까지 비난하였던 것이다.

한·소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 김일성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주의국가들이 변화했고 이미 중소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남북한의 긴장완화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일본도 몰타 미소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이후 줄곧 동북아에서의 긴장완화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견지해온 일본은, 그동안 71년에 설립된 ‘일조(日朝) 우호촉진의원연맹’을 통하여 대북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90년 9월 24일 가네마루 전부수상과 다나베 사회당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공동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일본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국제정세의 변화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같은 민족의 서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기존의 폐쇄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북아에 본격적인 화해의 신질서가 수립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평화노력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한국의 평화노력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대공산권 외교는 월남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1973년의 6.23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거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제5 공화국 시절인 83년 6월 이범석 외무장관이 ‘북방정책’이라는 말을 정부관리로서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후 용어만 북방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북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 때문이었는데, 6 공화국의 출범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인식이 바뀌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한국의 북방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외교관계수립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소련과의 수교도 현실화 되었으며 중국과의 수교도 목전에 두고있다. 이러한 6 공화국의 북방정책은 통일정책과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평화노력으로 정착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와 교류가 없던 저 대륙국가들에도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게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라고 북방외교의 의지를 피력했으며 북방정책이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

힌바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화해가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적 냉전구조 하에서 분단되고 나아가 분단의 골이 더욱 깊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국제사회의 화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국제적으로 신데탕트가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바람을 동북아로 이끌어오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10월의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 및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 구상을 밝히고 한반도의 대결구조 종식에 세계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남북한간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미·소·중·일, 남·북한이 참여하는 이른바 ‘동북아 6자 평화회의’를 제의했던 것이다. 이 동북아 6자 평화회의를 제의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과 미·일·중·소는 불가피하게 이 지역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노대통령이 제의한 바에 의하면 동북아 6자 평화회의는 휴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는 물론, 이 지역에서의 미·소대립 해결의 구체화, 일·소 영토분쟁의 해결, 그리고 한·중 관계의 개선 등 포괄적인 지역안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동북아 6자 평화회의는 현재 한반도에 2개의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한 상호관계 및 국제협력 보장의 양차원에서 이 지역에 안정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적 민족통일을 달성코자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노태우 대통령은 89년 9월 11일 정기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통일의 원칙은 7.4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에 기반하며, 궁극적인 통일은 총선거에 의한 민주공화체제의 단일국가의 수립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통일의 과도기적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의 시기를 두자는 것이다. 과도기적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처를 설치하며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함으로써 통일의 조건을 확립해 나가자는 제의였다. 이러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한 연합단계에서의 동등한 대표성 및 정치·군사문제 협의, 통일방안의 구체적 결정과정 등 북한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 과거의 한국의 통일방안은 인구비율이 2:1로 한국 측이 절대우위에 있었음을 의식한 것이었기 때문에 “흡수통합” 혹은 “패권적 통일안”이란 비판을 받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남북의 첨예한 대립상황에서 곧바로 연방국가화된다는 비현실성과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었

었다.

둘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완전한 통일국가에 이르는 전단계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취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고려연방제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수정·보완한 통일방안이다. 남북한이 지난 45년간의 분단으로 심각한 이질화의 상태에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과도기 상태의 남북관계를 설정하여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통해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문화적·경제적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남북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과도기와 통일국가의 수립을 하나의 단계에서 이룩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희박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민련 고문인 문익환 목사도 북한의 고려연방제가 지니는 비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연방 이전의 단계를 설정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셋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대화와 협상으로 진행시키자는 절차적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종전의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난 다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해 있었다면, 새로운 통일방안은 정치·군사적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그 동안의 통일방안이 소극적이었다면 새로운 통일방안은 적극적인 것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남북국회회담 등의 일련의 협상체계에 의해서 통일을 향한 구체적 절차까지 포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하여 소련의 언론들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북한도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남북고위급회담(남북총리회담)이 성사된 것을 볼 때 북한도 그 현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6자평화회의와 함께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유화와 민주화”, “개방과 탈냉전”으로 요약되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 호전되고 한국의 통일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설득력이 있다해도, 현재 통일논의의 대상인 북한당국은 여전히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자유화·민주화·개방화의 바람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선부른 낙관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독일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자유화와 민주화, 개방화의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통일조국의 미래를 낙관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을 꾸준히 찾아나가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한民族共同体統一方案과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方向**

鄭世九
(서울大)

目 次

1. 序 論	105
2. 現行 中學校 道德科教育과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07
3. 現行 高等學校 國民倫理科教育과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14
4.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指導를 위한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方向...	121
5. 結 論	130

1. 序 論

民族統一은 우리 韓民族 모두의 念願이며 당면과제이다. 현재 남북한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물론이고 모든 海外의 동포들까지도 우리민족이 빠른 시일내에 민족통일을 달성할 것을 회구하고 있다. 더구나 분단국 독일이 금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룩하므로써 우리는 유일한 戰後 分斷國으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分斷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개의 統一方案이 남북한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으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남쪽으로부터 제안된 통일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물론 정부당국에 의하여 제안된 통일방안 중의 하나고, 또 北으로부터는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통일방안이 다른 통일방안과 구별되는 가장 큰 特性이며 長點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韓國社會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광범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만들기 위해 200여회나 넘는 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광범한 여론조사 등을 거쳤으며 국회공청회까지 열어 興野정당은 물론 각급 사회단체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였다. 그런 점에서 同통일방안은 이제까지 제안된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本稿는 우리들의 靑少年인 中·高等學校 學生들에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어떻게 教育시키느냐 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同통일방안이 매우 최근에 발표된 것이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學校教育 특히 中學校 道德科와 高等學校 國民倫理科 教育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 방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本稿의

목적은 현행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어느정도 관심을 기울여 統一教育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앞으로 中等學校 學生들에게 統一教育的인 차원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지도를 하기 위한 教育的 方向을 제시하려 한다.

2. 現行 中學校 道德科教育과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 現行 中學校 道德科教育課程 및 教科書에 나타난 統一問題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1987. 3.31일 고시)의 도덕과에서는 ‘통일 안보생활’과 관련지어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교과목표에서 “국토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년목표 및 내용에서는 1학년의 목표에서는 “국토 분단의 비극 및 북한공산집단의 도발과 북한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깨닫고,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1학년의 내용에서는 “국토분단의 현실을 알아보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주국방 의지, 우리체제의 우월성 등을 지도한다”라고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분단의 원인과 현실
-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발
- 자주국방의 의지
- 남북한의 정치생활 비교
- 남북한의 경제생활 비교
- 남북한의 사회·문화생활 비교

2학년의 목표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문제를 깨닫

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통일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의 당위성,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을 지도한다”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국통일의 당위성
- 북한공산집단의 적화음모와 우리의 안보
- 통일의 장애요인과 그 극복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3학년의 목표와 내용에서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1·2학년의 교과서가 1종으로 편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中3 교과서의 경우에는 본래 새 學年度부터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현재 편찬중에 있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中3에서는 통일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中1, 中2의 교과서만으로도 교과서에 반영된 統一內容을 파악할 수 있다.

中1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主要 統一內容은 分斷의 原因, 過程 및 敎訓에 관한 것이다. 그 外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실과 함께 제시된 바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中1 ‘도덕’ 교과서에서 지적하는 分斷의 原因으로는, 첫째, 한반도의 地政學的 地位로 말미암은 강대국들의 개입을 들고 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韓半島는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항상 날카롭게 대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東北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반도를 각기 자신의 독점적 支配나 影響下에 두려고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 민족 内部的으로 민족통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단합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독립투쟁과정에서나 정부수립과정에서 우리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됨으로써 외세로 하여금 우리의 虛點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分斷의 과정으로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日本軍의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을 임시로 진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美, 蘇, 英의 3개국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민에게 5년 동안 信託統治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후 1948년에 남한에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뒤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되었고, 북에서도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분단의 장벽이 굳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分斷의 교훈으로는, 첫째로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경우가 되었던 外勢에 의존하려 하거나 외세를 개입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둘째로, 민족내부의 분열은 외세에 의해 항상 적극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自主國防의 태세를 완비하고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함을 중요시하였다. 또 이외에도 국민각자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에서는 분단 이후의 民族의 異質化 現象을

우려하면서 그 극복을 위하여 남북간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상호간의 不信 그리고 이질화에서 오는 생활상의 차이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질화현상 속에서도 수천년동안 연연히 이어 온 民族感情, 生活風習, 思考方式 등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앞으로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民族共同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민족공동체의식은 회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中2 교과서에서는 中1 교과서에서 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어, 조국통일의 당위성, 우리의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을 위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祖國統一의 當爲性으로서는 첫째로 우리는 같은 말과 글자를 사용하며 같은 풍속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통일국가를 이루어 생활해 온 歷史的 傳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15 해방 이후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분단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분단에 따른 고통의 해소를 지적하고 있다. 혈육간에 생이별하여 사는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서로 生死조차 모른채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동존상잔의 전쟁 위협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민족적 역량의 결집을 지적한다. 우리는 국토면적이 좁고 빈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남북간에 필요치 않은 경쟁으로 國力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분단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통일 노력들을 지적하고 있다. 19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통일정책의 목표가 失地회복과 '유엔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이었으

나 70년대 부터 냉전시대의 통일 방식을 탈피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구상하려는 방향전환이 있었다고 하였다.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과 1973년에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6.23선언)을 발표하여 평화공존과 공산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을 선언하였다. 그후 80년대에는 19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가장 최근인 1989년에는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방안은 특히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일정책과 비교하므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확신하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는 통일의 주인을 민족성원 모두라고 생각하는 데 반하여 북의 경우에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아닌 共產黨에 적극 찬성하는 일부 사람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데 반하여 북한은 전쟁에 의한 방법까지도 포기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60년에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제의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내세워 통일의 완결형태로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통일을 위한 자세’로서는 단계적인 통일의 장애요인 극복과 확고한 역사의식 그리고 통일을 보는 눈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강조한 바는 통일조국의 最少限의 條件을 밝힌 것이다. 그것은 통일조국은 민족성원의

삶의 質을 높힐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民族社會의 자주적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 조국은 복지국가여야 하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구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2) 現行 中學校 道德科教育에 나타난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중학교 2학년 도덕과 교과서는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同方案의 基本原則, 制度化하기 위한 機構의 설치, 그리고 主要特徵을 제시하고 있다.

이 통일 방안을 완성단계에 이르게 하기까지 견지하여야 할 입장과 자세로서는 自主, 平和, 民主의 3原則을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민주주의 원칙이란 통일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함은 물론 통일국가의 모습도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이 방안에서는 異質化된 民族社會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일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전제하에, 南과 北이 서로의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관계를 쌓아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일의 과정을 制度化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연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서 남과 북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고 있다. ‘남북연합’에는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설치함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特徵으로는, 첫째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과정을 두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정치·군사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남북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치·군사문제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밝혔다고 하였다. 셋째, ‘남북연합’내의 모든 기구에 대한 인적구성을 남북同數로 한 것으로서, 인구가 적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그동안 제시하였던 통일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통일실현절차와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3. 現行 高等學校 國民倫理科教育과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 現行 高等學校 國民倫理科 教育課程 및 教科書에 나타난 統一問題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1988.3.31. 고시) 국민윤리과에서는 통일 문제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

우선 교과목표에서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제반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교과내용에서는 학년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단원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분단의 과정’에서 국토분단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루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조국통일의 당위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편찬 개발한 교과서가 1권 있다. 교육과정에 준하여 6개단원으로 구성된 현행 교과서에서는 ‘4.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라는 마지막 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과 거의 마찬가지로 ‘조국의 분단’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조국의 분단’에서는 조국분단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戰後處理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점령함에 따라 국토분단이 시작되었다. 이 국토분단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같은 해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으로 고착되었다. 그 배경 내지 원인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祖國分斷의 國際的 要因은 1차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에서 찾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서로 마주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 2개 이상의 경쟁적인 강대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 간의 세력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국토분단은, 연합국들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서 편의상 취한 조치였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을 통해서 한반도 독립문제를 여러차례 論議해오던 연합국들은, 잠정적 조치로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이 남한에, 소련군이 북한에 각각 진주하여 각 지역에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고, 북한에서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련군은 1945년 8월 25일, 평양에 진주하여 38도선을 봉쇄함으로써, 인적교류는 물론 서신왕래까지도 차단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9월 14일 군정의 목표로서 근로자, 농민, 산업노동자 및 일제에 항거한 인사들을 대표하는 정부의 조속한 수립, 농민을 위한 토지분배, 노동자 위원회에 의한 敵産산업시설의 접수, 친일분자에 대한 숙청, 모든 교육·문화시설의 공유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10월 28일, 북한지역 5개 道 인민정치위원회를 통합하여 5도행정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2월 8일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

족시켜서 북한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소련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하였고
뒤이어 ‘북조선 노동당’이 창립되었다. 이어서 1946년 11월에는 지방인
민위원회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47년 2월 17일에는 북조선 최고인민
회의가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정부편제를 갖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발족된 것
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성을 토대로 하여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三相會議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부수립이 이루어져,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지역에서 총선거
가 실시되었고, 뒤이어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선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祖國分斷의 요인으로는 민족내부의 자주독립역량 및 통일역량의 부
족도 지적되었다. 우리민족은 독립운동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소련군
의 힘을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이익보다는 당파와 계급의
이익을 앞세워 소련의 정책에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민족내부의 응집력을
약화시켰음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서, 먼저 민족사적 전통의 계승에서 발견하였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개인과 전체구성원 간에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인간
의 존엄성과 평화를 숭상하여 왔다. 분단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발전시키고 있으나 북한은
소위 ‘노동당’, ‘노동계급’, ‘위대한 수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정계급, 특정인은 중시하면서도, 우리민족 모두의 존엄성과 우리가 가꾸
어 온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

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정부수립절차와 유엔의 합법적 정부승인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8.15 광복 당시 한반도내에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조직의 설립과 그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유일한 국제기구였던 유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1947년 9월 17일에 한국독립문제가 정식으로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되자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에 열린 유엔총회의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인정하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외에도 거족적인 3.1 독립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3일에 수립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와 건국이념을 계승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 前文의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국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 지금까지 살펴본 ‘조국의 분단’에 뒤이어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는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祖國統一의 當爲性으로는 다음 몇가지가 지적된 바 있다.

첫째, 통일은 우리의 民族史的 요청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檀君을 함께 모시고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특히 통일신라 이래 1,300여년 동안 다른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에

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잃지 않고 통합된 국가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상태를 계속할 이유는 없음이 지적되었다.

둘째, 통일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異質化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40여년간 단절된 채 서로 다른 理念과 思想을 지녀왔고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제반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체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대로 분단상황이 계속된다면 남북한은 전혀 상이한 文化集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간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人道主義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결하는 데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民族力量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통일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南北韓 統一政策의 比較에서는 6.25 이후 시작된 남북한 간의 통일정책이 시기별로 그 특성이 지적 비교되고 있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남북한 관계는 냉전이데올로기의 논리하에 상호체제 비방 및 불인정, 극단적인 상황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어떤 정책적 접근도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1970년대의 남북한 관계는 네탕트를 추구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화해와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원칙 등이 발표되었다. 그 후 북측에서는 1973년 ‘고려연방국’안이 나왔고 남쪽에서는 1982년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제시되

어 남북한간의 이상적인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겨레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 자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국가를 수립하자고 하였다. 뒤이어 1988년에 ‘7.7특별선언’과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북측에서는 ‘고려연방국’안이 주장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서는 統一祖國의 未來相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자주적인 민족국가, 민족성원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풍요로운 복지국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국가임이 강조된 바 있다.

2) 現行 高等學校 國民倫理科教育에 나타난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현행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중학교 2학년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 별로 더 상세하지 않다. 그 주내용은 기본원칙, 통일기구의 설치·성격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적 방식에 따라 통일을 달성해 가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 통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공존공영, 이질화극복, 공동생활권 형성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南北聯合’이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남북연합’안에는 최고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와 쌍방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그리고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

성되는 ‘남북평의회’가 설치된다. ‘남북각료회의’에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人道, 政治, 外交, 經濟, 軍事, 社會, 文化 등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남북평의회’에서는 통일헌법을 기초하며,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초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하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특징을 요약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을 지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를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통합을 일거에 달성하고자 하는 데 반해, 이 방안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통일을 구현하려는 것이 그 특징이라 지적되고 있다.

4.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指導를

위한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方向

1)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改善方向

앞에서 中等學校 道德科와 國民倫理科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統一教育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공히 조국분단의 배경과 과정에서부터 조국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와 당면과제도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 다룬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좀더 보충되었다면, 대한민국의 正統性和 통일 이후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조국의 未來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統一教育改善을 위한 方向에 대해서는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南北韓關係에 대한 새로운 教育方向’(1988)이라는 연구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 위에 참신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인용, 제시하려고 한다. 제안된 새로운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동족감정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성장의 기초가 국민학교와 같은 초기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등을 지나치게 고취시키는 내용은 동족감정을 해친다고 하였다.

둘째, 남북한 관계를 단순한 黑白論理로 설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黑白論理에 입각한 ‘좋은 한국’ ‘나쁜 북한’과 같은 이미지 형성으로 비타협적 성향의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할 제 2 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종래의 ‘반공감정형 위주’의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이론적인 면에서 공산주의의 이념 및 현실을 깊이있게 비판할 수 있는 ‘知共教育’이 필요하다. 현행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공산주의 체제를 파악시키고 그 비판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영역이 압도적인데 반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이해하게 하며 그에 대한 비판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은 매우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 표현에 있어 너무 경직되고 과장된 표현이나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내용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호의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되고 과장된 표현은 학생들에게 설명의 근거를 잃게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교육내용을 좀 더 객관성있게 다루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현 교육과정은 북한의 실태를 소개하는 내용을 북한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교육의 신망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관계를 모두 객관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비교적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교육내용으로서 남북한 이질성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질화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민족의 이질화문제를 다루려면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를 두어 가볍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곱째, 북한사회 전체를 ‘不變의 惡의 集團’으로 기술하거나 일률사

회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도 우리와 똑같은 동족이 사는 사회이고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북한 전주민들도 독재자들의 명령에 저항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교육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국가와는 달리 학생들이 이러한 분단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항상 갖도록 해야 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2)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指導를 위한 中·高等學校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개선방향은 앞에서 상세하게 지적되었으므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의 지도도 이러한 방향의 테두리 안에서 지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의 지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以前에 주장해 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나 북한이 전부터 내세우는 ‘고려연방제방안’과 비교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가 내세우는 통일방안의 장점만을 강조할 경우,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의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통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통일방안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국토통일원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1989.9)에서 제시된 두개의 표

에서 표시된 내용을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 분	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민족자결 민주 평화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 음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최고결정기구)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 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 민주적방법·절차→총선거 실시→ 통일정부·통일국회수립	민족통일협회의의→통일헌법기초 →국민투표로 확정·공포→총선 거 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수립
통일국가 기 구	국회는 양원제	없 음
통일국가 정책기초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 보장, 대외선진 우호관계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협의· 결정
통일국가 미 래 상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민족, 민주, 자유, 복지

구 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 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전제조건	없 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 음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최고결정기구)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 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거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 협의 · 결정
통일국가 기 구	국회는 양원제	「 최고민족연방회의 」 「 연방상설위원회 」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 보장, 대외선린우호관계	「 10대 시정방침 」 ※ 자주적정책 실시 민족경제 발전보장, 민족문화 · 교육통일적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등
통일국가 미래 상	자유 · 인권 ·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없 음

둘째, 최근에 이룩된 독일의 통일과정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현방안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남북통일이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주고 우리의 통일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통일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서독의 헬무트 콜총리조차도 통일을 이룩하기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통일은 꿈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의 통일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1년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의 지도자들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동독과 서독국민들을 설득하여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고 소련을 비롯한 미·영·불의 점령 4개국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 수천억달러로 추산되는 동독의 재건비용도 주저하지 않고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통화통합을 앞당기기조차 하였다.

우리의 경우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이 있으므로 이 기구를 통하여 독일이 준비했던 일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에게 조사하고 탐구하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독보다 더 완강한 스탈린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고 우리 한국의 경제력은 동독을 인수한 서독처럼 부강하지 못하다는 점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도함에 있어서 동 방안을 하나의 완결된 방안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항상 융통성을 가지고 가변성을 지닌 방안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동방안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장해 줄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시도에 따라야 할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항상 융통성있게 변형시킬 수 있는 통일방안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통일방안을 우리가 탄력성있게 지도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는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로서 가르쳐야 하지만, 동시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간의 대치상태 속에서 우리의 적으로서 현존하는 북한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의 이중성을 또한 가르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방향전환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 45주년 기념연설에서 북한주석 김일성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한 소련과 동구권을 비난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와 “노동당의 지도, 강화에 의한 주체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기본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본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만 동방안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동시에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네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수준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따르면 동방안에 대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중학교 도덕과의 경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미에 대해서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하였고 동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입장과 자세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 통일을 촉진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연합’이라는 기구를 설치할 것과 그 밑에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도 지적되었다. 또 가장 중요시하여 지적한 내용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특징으로서,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 ‘남북연합’내의 모든 기구에 대한 인적구성을 남북동수로 한 것 등이다.

고등학교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도 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나 3대원칙 그리고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 통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공존공영, 이질화 극복, 공동생활권 형성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제의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강조하는 내용도 중학교의 내용과 수준별 차이를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동 통일방안을 다루거나 혹은 교사들이 직접 도덕과나 국민윤리과 수업에서 이 문제를 지도할 경우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의의, 원칙, 기구 등을 평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방안을 그대로 이해하고 파악케 하는 수준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고차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려 할 경우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점이라든가 장애요인까지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1990년 10월에는 남한의 총리가 북한에 가서 직접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남북한간의 정상회담 가능

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사태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행보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더 빠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요약한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인 타당성을 지닌 통일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의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는 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통일방안으로서 동 통일방안을 지도하고 더 시의에 적절한 대안을 고안해 보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稿에서는 현행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에서 통일 문제를 어떤 시각과 어떤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제시하였고, 특히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떤 점이 강조되고 있는가도 밝혔다. 그리고 끝으로 전반적인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또 특히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지도를 위한 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중학교 도덕과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으로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어 조국통일의 당위성, 우리와 북한의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들이 취할 자세 등이 강조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통일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철한 역사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동방안의 기본원칙, 동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주요특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는 국토분단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이 강조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통일내용은 중학교와 수준상의 별 차이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상세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별차이없이 동 방안의 의의, 기본원칙, 통일기구의 설치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지도를 위한 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로 동 방안을 현행 교육처럼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부터 주장해 온 통일방안과 비교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방안과도 비교하면서 입체적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는, 가장 최근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과정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에서는 그와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급변하고 있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한 관계에 대비하여 단순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만이 최선의 통일방안이라는 획일적 자세를 벗어나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안적인 개선방안이 항상 나올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탐색하게 하는 탄력적인 지도방안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統一理念과 民族共同体形成

1990년 12월 일 인쇄

1990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통일원 조사연구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인쇄소 :大成堂
